

제427회 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4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요청안 ..... 6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 7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권철승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상옥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상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옥 위원입니다.

외통위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염려합니다. 한반도의 대립이 격화되고 한국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또 북한의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면서 그 힘의 충돌이 한반도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중의 대립은 미래 어느 때 대리전의 필요를 낳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내부 대립이 심해지면 한반도의 대리전 위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그 힘의 대립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북한-중국-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이 철도로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의 수출품이 부산항을 통해 육로로 유럽까지 전달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섬이 아닌 대륙과 해양 연결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I와 로봇틱스가 고도화되는 시대, 이제 인건비가 아닌 물류와 관세가 제조업의 최적

입지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거점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국가 크기입니다. 때문에 물류와 관세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물류를 건설하고 저비용 관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제인 평화 건설입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외교와 북한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 가는 균형 잡힌 평화외교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물류·교역·문화·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이요,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증인도 꼭 참석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당 측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문회의 기본은 성실한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연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러서 국민의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총 1334건의 자료 중에서 331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경위를 살펴보니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배우자와 직계비속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비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 이렇게 후보자 개인이 전부 정보공개 미동의를 해 버리면 청문회를 열지 말자는 뜻입니까?

후보자가 서명하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보공개에 미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원활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의도였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오늘 국무위원후보자 신분에서 앞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선 의원

을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을 해 오신 후보자께서 정작 본인의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청문회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

김영배 간사님.

####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요청안 왔을 때 회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검증하는 게 오늘 인사청문회의 핵심적인 목표일 텐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나 아니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개인 가족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 협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증인은 채택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충분히 저는 소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해 가지고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배우자께서 혼자 계신 집에 3명이나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도 보면 언론하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주거침입 이런 걸로 고발도 하시고 막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 사생활 공간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공적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공적으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지난 과정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하는 과정이 전혀 본인의 동의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 319조, 320조에 보면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적 다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법의 정신을 잘 존중해서 최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식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외교·안보 사안이 너무 위중한 상황이고 관세 협상을 비롯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장관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협력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간사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정책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사생활 관련된 것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 관련 요구를 보니까 저희 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쌀 직불금 수령 내역부터 해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소유 차량 과태료, 부동산 거래 내역, 여당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사실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본인 동의가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물론 가족 중에 아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인 것은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청문회를 정책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2023년에 있었던 통일부장관후보자 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의해서 1시간여 파행된 적도 있고 그때 간사셨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정말 협조가 지나치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의 자료 협조라면 사실 이것은 봉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까지는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게 지나치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배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평소에는 후보자가 국회 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 혼자 있는 집입니다. 그 집 안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온전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보면요 사적인 공간에 무단침입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몰사이기도 하지만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3명이에요. 이러면 다중이에요. 그 배우자가 홀로 집 안에서 느꼈던 공포, 저는 상상이 됩니다. 물론 사생활 검증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적인 영역과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줄로 알고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고민이 있겠지만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건대 여기만 가신 게 아니라 명함을 주고 인근을 제 표현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들쭉시고 다니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사는 또 후보자의 가족이 영위하고 있는 온전한 사생활 공간까지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떤 의원실에서 파견된 것인지는 인접 기관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소통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사 위원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와 같은 방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를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정동영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문회를 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이걸 누군가가 상부 컨트롤타워에서 오더가 내려간 것이다. 그냥 자료제출은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무조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면서 막가파식으로 ‘너희들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꺾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모습으로서 적절할 것인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집권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태도가 짝 바뀌신 것 같아서, 180도 바뀐 것 같아서 참 의아합니다. 국무위원 후보는 도덕성과 그리고 자질·능력을 다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법으로 농지를 막 취득해서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국민들이 그러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정밀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증인 신청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지의 전 소유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소유자인 박홍주에 대해서 증인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다 거절했습니다.

배우자 민혜경 씨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민혜경 씨가 이 주소지가 되어 있느냐, 관계가 어떠냐 자료제출 했는데 일절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라도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자료제출도 왜 주소지가 전 소유자하고 같은 곳에 되어 있느냐, 박홍주인 전 소유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세나 수도세 낸 자료를 내라 했더니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계약서, 매매계약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중도금 지불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 영수증도 제출하라는데 거절했습니다. 이래 놓고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입니까? 불문회지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이런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계약서를 못 내겠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증인·참고인 채택 안 된 사람들 지금이라도 본인 동의 받아서 출석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문회가 되지요.

○**윤후덕 위원** 이제 시작하지요. 제가 첫 번째 질의인데. 회의를 시작합니다, 질의를.

○**위원장 김석기**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업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아울러서 도덕성·준법성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자리에서 갖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양당 간사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사람을 신청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가족의 태양광사업 이런 문제가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게 이해충돌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인설비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위원이 계셨는데 이런 게 안 나왔고 그다음에 기초질서 위반, 범칙금 이 실태도 내 달라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각종 민원과 관련해서 피신고됐거나 피소됐다 이런 현황 자료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국세청 소관 80건 자료를 전부 다 본인이 부동의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하루종일 검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자료, 낼 수 있는 자료는 후보자가 판단해서 오전 중에 빨리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지적된 사항들, 그 자료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귀향·귀촌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산 땅 관련 소유자 증인도 신청하셨고, 계약서 이런 것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서 민원 등 피신고된 사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자료 이것은 주로 가족들 부분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부동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마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낼 수 있는 것은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자료를 성실하게 내셔야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후보자께서는 가능한 한 필요한 자료를 오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10시25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후보자 정동영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동료의원이자 장관후보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 심화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구조적 환경도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태입니다. 엄혹한 국제정세 앞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를 씬 없이 써 내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공존을 향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을 통해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과 함께 화해 협력을 1단계로 하는 점진적·단계적·평화적 통일에 대한 폭넓은 국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4 정상선언을 통해서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국민들의 인내와 저력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

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 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춰 서버린 1단계 화해 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한반도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말 독일 민족은 그 길을 걸었고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바로 그날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의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빛과 실처럼 제 삶을 비추고 생각을 묶는 화두였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의 소명으로 삼았던 명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면 그동안 쌓아 온 저의 경험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 늘 함께할 것입니다. 국회와의 소통, 협치, 초당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주질의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접경지역 파주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이전에 통일부장관을 하셨지요. 그때는 인사청문회 없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인사청문회 없는 마지막 장관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최근에 이슈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전에서부터 있었고 이번 대선, 그전의 대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연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 봤어요.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한반도부, 한반도정책부, 평화통일부, 남북관계부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후보자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좀 주시고.

나는 역시 그대로 통일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혹시 변경한다면 평화통일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1969년 브란트 정권 등장 이후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습니다. 소련이 환영했고 영국, 프랑스 등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고 하는 우려가 주변 국가에 있었던 반면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독·소 조약, 모스크바 협정 그리고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협정 등등 그리고 동·서독 기본 조약,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 동·서독에 있어서 대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남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상호 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서부터 북한이 특수관계를 파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하려고 선언을 하고 또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북한이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헌법에 반영을 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금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두 개의 국가로 한다 그런 안건 자체도 상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애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하고 남한을 적으로 명기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정치적 연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로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직까지는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당시 북한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인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 대통령이 돼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셔서 북한에서도 사실은 헌법에 두 개의 국가로 명시하는 것 전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은 강대 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설립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5년 동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계승·발전돼 왔습니다. 이것이 3년 전 사실상 폐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공통일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 바로 북이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적대·평정·군사적 교전 상태로 규정하게 만든 상호적·상대적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 PPT 하나만 올려 주세요.

이 사진에 있는 저분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최성룡 회장님.

○**윤후덕 위원** 남북자가족모임의 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임진각에서 이분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정동영 신임이 될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통일부하고 장관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자기들 호소도 제발 담아 달라,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들도 이해하는데 그전에는 서로 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신임이 되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좀 접촉하면서 이해시키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을 설득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윤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최성룡 회장을 만나서 대화 소통하시고 정부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제 시간은 끝났는데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다음 질의도 있는데요 새로운 질의에 들어가기에 좀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것만. 후보자에 제기가 되는 신상 의혹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입니다. 질의시간 지났으니까……

○**윤후덕 위원** 태양광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농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 보충질의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설명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때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다음 순서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유용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20년 만에 또 중책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청문회를 통과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후보자께서는 18년 전에 대선후보셨고 5선, 제 정치 대선배시기도 하고 또 언론계 대선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께서 말씀하신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후보자님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제기돼 그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님을 둘러싼 이른바 태양광 가족법인 운영 실태와 후보자님 가족들이 농업 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볼 게 많아서요 가급적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 빛나라에너지의 주소지가 후보자님의 과거 전셋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분께서는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같은 전셋집을 주소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의 실소유주가 후보자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셋집을, 여러 번 주소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신고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3월에 전주병 국회의원 신분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셨지요? 그 내용은 태양광……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공동발의입니다.

○**유용원 위원**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설비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떼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하셨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공동발의고요. 저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그 땅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 일곱 분이 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거기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저도 82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배우자 민 씨께서 전국에 태양광 필지 스무 곳을 보유하고 있고 아드님 두 분께서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곳곳에 최소 네 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몇몇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스무 곳이 아닙니다. 아마 집사람이 보유한 곳은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의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습니다만 일반, 특히 직장인들 경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처럼 저는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유용원 위원** 후보자님, 제 질문 좀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형 FIT, FIT 제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유용원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제도는 농축산어민 수익 안정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전년도 경쟁입찰 평균가 중 최고 값을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매입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후보자께서 소유하셨던 태양광 업체하고 현재 후보자님의 배우자, 자제 분들이 소유하신 업체들이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 아내가 소유한 다섯 군데의 태양광발전시설 가운데 아마 한 군데가 FIT,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하지만 한국형 FIT 제도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사실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던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PPT는 장남이 소유하고 계신 충북 소재 태양광발전 부지 분양공고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 폐지 전인 2022년 3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FIT 제도는 농축산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100kW, 소형 태양광발전 에너지를 나라에서 비싸게 사 주는 이러한 제도인데 후보자 장남께서는 미국 변호사로 자격을 갖고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벤처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태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소유의 태양광이나 제 아내 소유한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태양광이고요.

제 아들은 말씀처럼 고액 연봉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압니다.

○**유용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에 있는 전—그러니까 농지지요—약 614평을 2021년 1월 달에 이전하셨던데 전 소유자가 박홍주라는 분입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어치리 704-1이 전 소유자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동계면 장군목길 832 되어 있어서 다른 주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대입을 시켜 보니까 같은 주소지의 도로명 주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 박

홍주 씨하고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특히 이전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니까 후보자는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했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한 500m 떨어진 인근의 농지를 취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땅을 쪼개기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한 300평 되는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주택을 지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어요.

그 취득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지니까 당연히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취증,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란으로 가득합니다.

그중에 오른쪽 난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필수 사항들을 기재를 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낸 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거리 그러니까 땅하고 거주지하고의 거리겠지요. 가까워야 농지로 할 수 있지요. 이 농지로부터 전주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거리에서 불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아마 인근에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영농거리 난은 그래서 공란으로 해 났고. 주재배물, 주재배 작물의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업 경영 능력, 농업 장비의 보유 현황과 보유 계획도 전부 다 공란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이런 서류로 어떻게 농취증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순창군청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세 번째인데 현재 그러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한 300평 정도 되는 대지로 바뀌어져 있는 집입니다. 아마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곳에 있는 그 옆의 땅 그게 지금 옆에 농지라고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이게 농지인지 아니면 별장의 정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세모 빨간선 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꺾인 선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잡초가 매우 무성하지요. 현재 전혀 농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한 땅 중에 일부는 이게 별장 정원인지 농지인지 확인이 안 되고 일부 분할돼 있는 668-18 이게 원래 샀던 땅 일부입니다.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중에 일부에는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사진은 두릅이 심어져 있는 밭 이렇게 농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 텃밭 사진이라는 곳은 668-18이 아니라 666-10번지이고, 두릅이라고 했던 곳은 후보자나 배우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삼자 소유의 다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현황 상황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이 땅이 2018년도에 그 농지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3년 후에 이 농지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 지번을 쪼개 가지고 한 300평 되는 땅에는

지목을 변경해서 주택을 신축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인 박홍주 씨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주민등록지를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위장전입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 위장전입한 이유는 영농거리가 멀면 안 되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서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이전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취득할 수 있지만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시간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500m 거리에 있는 이장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방자치단체는요 지역구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1개월 후에 본인은 왜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데 전입,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 다음에 2개월 후에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아예 농지를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50년 만에 귀향하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임야 그동안 버려 놓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영농하기 위해서……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귀향한다 그러면 대지를 사서 주택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실 분의 처신에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렇게 농업취득증명서를 영터리로 해서 신청을 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영터리로 해서 신청했다, 이게 허가가 났다? 이것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방자치단체가요 그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절대농지 까지도, 일반농지를 다 대지로 적극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결국은 거짓말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아니, 제 말의 질문은 농지를 다른 땅을 사진 찍어 가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택을 대지로 바꿔서 주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옆에 있는 토지가 아무래도 공사 중에 훼손이 되지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께서는 양해를 했지만—그게 작은 조각 땅이었어요, 160평짜리—‘제가 훼손된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도로 부지로 예정돼 있어서 절반은 도로로 수용되고 나머지 80평을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다 잔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야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어서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에도 누락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두릅발입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아, 이것 제 땅도 아닌데 두릅발이라고 거짓말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계약서도 있고 등기 절차를 안 한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후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계약서를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드릴게요, 계약서.

○**김기현 위원** 그 두릅발 계약서를 주십시오. 그것 제출 안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주인이 박종례 씨라는 마을 주민인데요.

○**김기현 위원** 계약서를 주세요.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두 번째 통일부장관이 되시고 또 장관 재임 시절에는 각종 남북 행사 그리고 남북 당국자 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착공 그리고 첫 제품의 출시,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되게 벽찬 일들을 함께하신 장관후보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막혀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통일부를 이어받으시면서 이만한 책임자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말씀 여쭙고 싶은데 계속 검증을 이유로 다른 이야기 질의를 하셔서 모두에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낙선하고 진실로 귀향을 고민하던 중에 귀향을 위해서 터를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거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것은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거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 신지 그분의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이런 위법 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후보자의 경륜으로 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도 통일부장관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굳이 또 격에 안 맞게 두 번이나 똑같은 장관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셨나 보다’ 이런 기대도 되거든요.

이 두 번째 장관직을 수락하시면서,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휴전 상태, 대학 때도 휴전 상태, 군대에 갔을 때도 3년 내내 휴전 상태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그 아들이 커서 또 군대에 갔을 때도 휴전 상태, 이 휴전 상태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렇게 7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 가장 낮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앞장서서 선도했던 것이 개성공단, 개성 평화도시였고 그리고 북핵 포기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지휘한 NSC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꿈은 좌절됐습니다. 독일 같으면 20년 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고 개성 평화도시가 만들어진 20년 뒤라면 아마 최소한 남북연합은 와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1970년에 처음 정상회담 하고 20년 만에 통일로 갔습니다. 20년 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 좌표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것을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바뀌고 또 탈북자 송환이라든지 그리고 대북전단이 중단되면서 보이는 간접적인 어떤 모멘텀들의 흔적들이, 기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전 정부의 이런 실정으로 꼭 막혀 버린 남북대화의 창구 물꼬를 틀 수 있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대북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남남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와 보수정부였던 김영삼 정부가 합의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여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것은 완



전히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폐기했던 반공 통일론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계승·발전해 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뭐냐, 화해 협력입니다. 그리고 서로 남과 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9·19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정 위원** 예. 이렇게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깐 제가 이 질의 하고 싶은데요.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교류가 그럴 때일수록 남은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끊겨 있어요.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제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여덟 번의 남북교류협력 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고 사실상 전 정부에서는 끊겨 있던 민간교류,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선민후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4원칙 중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선경후정’ 경제를 앞세운다. 그리고 ‘선공후득’ 먼저 베풀어라 하는 것이고요.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해라라는 건데, 가장 쉽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민간교류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민간교류 신청 4000건 있었고 4000건 다 접촉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00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0건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는 사실 제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부처 명칭 변경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 그 모든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괄해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 낼 수 있는지, 법의 취지, 우리들이 함께 합의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통일부가 기능할 수 있는지에 본질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정 위원** 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시다.

○**김기현 위원**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이재정 위원** 밝히셨네요.

○**김기현 위원**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안 냅니다. 본인도 위장전입했다고 방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두릅발 말씀하셨는데 두릅발은 샀는데 아직 이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허위신고한 거지요. 재산을 속인 거지요. 계약만 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불법입니다. 위장전입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릅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샀다고는 하지만 서류도 안 내고 이제 내겠다는데 보겠습니다마는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두릅발 땅이 있고요 텃밭 땅이 있는데, 두릅발 땅은……

○**김영배 위원** 저것 질의 내용입니다. 본질의 때 하시지요.

○**김기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667-17 두릅발 사진은 다른 거고……

○**이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합당한, 신상발언에 합당한 발언까지만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본질의 때 하시지요.

위원장님, 본질의 때 해야 될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위원** 668-18 텃밭 사진은 다른 건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수행 과정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증인도 전부 다 봉쇄합니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지요.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위원장께서 이런 걸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정식 사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고약하다고요? 저도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모두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어집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야말로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이유는 공적인 일을 공적인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주어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그 한정된 권한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조차, 수사에서조차 독수독과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이 묻은 나무에서 자라나는 소위 증거는 제대로 된 정당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도 그러할진대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형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혼합해서 그냥 내 목적이 정당하니까 이것은 다 무조건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저도 신상발언입니다, 고약하다는 발언에 대한.

○위원장 김석기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사실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다음에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좌관들이 가서 활동을 한 건데 그것을 무조건 범법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짓’이라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은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조국 청문회 전날 자제분인 조민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던 기자·PD도 이미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범법행위다라고 단정을 하시고 그렇게 동료 의원실에서 범법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짓’이라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은 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발언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저는 특정 위원님의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가 제공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짓’이라고 한 것, 저는 위원님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닿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영상, 사진을 통해서, CCTV 캡처본을 통해서 보여 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유지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기왕에 판례를 김건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사례는 공용부분이라고도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아까 들어갔던 내용은 내실이 들여다보이는 마당, 앞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신 율사이신 줄 압니다.

제가 ‘짓’이라고 한 것은요 저런 짓, 그렇게 들어갔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과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지요.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위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 할 때 위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시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김기현 위원**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

○**이재정 위원** 뭘 또 드립니까?

○**김기현 위원** 아니, 신상발언을 저한테 대해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아니, 나보고 ‘이런 짓’이라고 해 놓고 뭘 또 다른 말씀을 뽕뽕 둘러서 하세요?

○**이재정 위원** 뭘 뽕뽕 둘러…… 말을 그렇게……

○**김기현 위원** 아니, 이재정 위원이 얘기를…… 좀 전에 내 뒤에 있는 보좌진까지 거론을 하면서 얼굴이……

○**이재정 위원** 아니, 다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뽕뽕 돌리고’가 뭘니까?

○**김기현 위원** 아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내가 들었잖아요. 들을 줄도 아셔야지요. 나는 자기 얘기할 때 들었잖아요. 좀 들을 줄 아세요!

○**이재정 위원** 아니, 그런데 단어는 좀 가려 가면서 합시다. 예, 듣겠습니다. 가려 가면서 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본인이 가려서 말씀하세요!

○**이재정 위원** 예, 짐작게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함부로 그렇게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생각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건데.

○**이재정 위원** 함부로 말씀하시지나 마십시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듣기 거북한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지 않으시면 위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빨리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사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오늘은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국정수행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도덕성이 제대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또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를 정확히 물론 하셔야지요. 그런데 상대 위원님에 대해서 적어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격에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쪽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옆에서 보니까 어찌 됐든 처음에 공무를 위해서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면 뒤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더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임명 정치 소명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후보까지 지내시고 또 내려가는 것이고 구태여 왜 두 번 하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평생에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가 닿아야 하는 것인데 동시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부담도, 책임도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대외환경은 저는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한 이후에 이렇게 나쁜 대외환경을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을 정도냐 할 정도로 우려가 큼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것을 만든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흔들리고 있고요. 남북관계는 최악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적대감만 키우고 남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유사 상황에서 이것이 전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런 것도 다 깨졌고 북한마저도 이제 교전 중인 두 국가로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 번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까…… 저는 정동영 후보자님보다 더 적절한 인물이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마냥 낙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냥 단순히 해 보겠다가 아니라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결국 대외정책에 있어서 힘은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적 지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보수정부 때 기치를 세웠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했고요.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남북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강 대 강 결과물이 적대적 두 국가로 왔지만 그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3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상호 존중, 상호 공존……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4번, 전복·파괴하지 아니한다. 5번,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자. 얼마나,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대헌장입니다. 마그나카르타입니다. 이것은 또 보수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게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 합의,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 북도 호응할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우호적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보수는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는 데에서는 더 이상 어떤 이견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보면, 어 제지요 북한이 한미일 공중훈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김병주 의원께서 무인기 보낸 것 좌표 중의 하나가 김정은 숙소로 추정되는…… 사실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도 국방부 쪽에서는 대대 쪽에서는 오히려 참수작전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참수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2월에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당장에도 지금 이런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또 지금 한미 연합훈련 또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뭔가 없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묘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훈련 어떡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김준형 위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물꼬를 텃던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준형 위원** 이것은 전혀 비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보시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서훈이나 또는 지금의 이종석 장관이나 정동영 후보자처럼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북한이 좋아할 인사, 그러니까 북한이 적어도 나와서 대화할 만한 상대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나쁘지 않나.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비난을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라고 협력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북한은 더 불신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부적격 인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불발 이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미군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한미 군사연습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리고 돈 낭비다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것을 그때 8월로 예정됐던 그 훈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북미관계·남북관계에 동결 상태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이재명 정부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늘 남북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 의원께서 장관후보로 임명되신 것도 이재명-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재명 정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

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금은 캄캄하지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직접대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입니다. 그 상황과 함께,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문제화돼 있습니다. 국제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미 대화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만약 그렇게 여건이 돼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하신다면 주목적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한 비핵화가 주된 목적이 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 강화가 주목적이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뭐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3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십만 배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입니다. 국제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선은 북이 비핵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역시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대화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남북을, 또 국제사회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핵화는 고사하고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 성과도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북은 지금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이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리 북·러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북·미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엇그제 원산 갈마반도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거기 호텔만 만 실입니다, 만 실. 러시아 관광객만 가지고 원산 갈마반도의 대형 리조트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대화 수요 또 관계 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다음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다.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규정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 후보께서 2024년, 작년 9월 21일이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정신의 위반이고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 기둥 아래에서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 포기론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상호 인정·존중을,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대, 평정, 완전 평정 그리고 군사적 적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를 국가성을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 방점은 적대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핵심이 있는 것인데 이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30년, 30년 이상 우리는 사실상의 두 국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평화통일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2개 국가론 그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정신은 사실은 하나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개의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통일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다뤄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2개의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서독이고 하나는 우리 선조의 지혜입니다.

동·서독은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동·서독 기본 조약에 보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조항에 그렇다고 동독이 외국은 아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선조의 선인, 선현 중에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불일불이(不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남과 북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상태입니다.

○**안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개헌이 되지 않은 지금 상태의 헌법정신에 보면 두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것이 바로 관념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헌법에 있어서 동독을 전체의 일부로 간주했지만 그러나 국가성을 인정하는 절충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반면 우리는 이것을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고 간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을 때 그 조항을 포함시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헌법 조항은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될 터인데 아직 헌법 개정에 대한 저의 의견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안철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정동영 후보님!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용선 위원 두 번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첫 장관 시절에 그 당시에 북핵 협상이 팍 틀어막혀 있었던 어려운 국면에서 특사로 북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9·19 6자 회담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 내서 막힌 북핵 협상의 큰 돌과구를 열었던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의 배경,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두발언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폐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 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된다. 방식은 자유의 북진이 아니라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의 물결을 다시 돌려세워야 합니다’라는 나침반 각오와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큼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새로 두 번째 장관을 맡게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정부 때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의 존립 목적은 헌법과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통일부의 업무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윤 정부 3년 2명의 통일부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쪽 앞의 화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권영세 장관과 김영호 장관 이 3년 사이에 통일부는 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축소·왜곡·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능들은 거의 형해화될 정도로 축소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담당하는 인권, 주로 공세적 인권 캠페인 그리고 대북 심리전 조직들이 중심으로 자리잡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인권부, 남북대결부로 통일부가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평화, 대화와 교류 협력은 금지어가 돼 버렸지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난도질돼서 실제로 통일부의 본연의 업무 예산은 거의 대폭 삭감돼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니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는 저장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 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에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부가 축소되고 기능이 왜곡됐다는 지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업무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대결부의 성격을 가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원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의 복원, 원상회복 그리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통일부 성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지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 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 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것이 일관 성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 기본합의서가 지금 34년 경과했는데요 그 방향으로 쪽 왔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점에서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특히 가다 서다, 냉탕 온탕을 반복한 이걸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우리도 한반도 리스크가 아니라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서울 강서병 한정에입니다.

후보자님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후보자님의 임명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한정에 위원** 오늘 모두발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정상선언이나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서 한 치도 비켜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보수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남남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 안에서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기인해서 지속돼야지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 관된 정책,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바뀌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결국은 견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요 또 동의하고 그렇게 반 드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처해 있는 일종의 적대적 관계 이것을 결국은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방식으로 돌려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화적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 몇 개를 본다고 하면 만약 내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이런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실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쪽의 영유아 보건지원 사업은 유니세프가 유일하게 국제기구 가운데 올해도 30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660만 불을 추가로 약속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와 협의해서 유니세프에, 이걸 지원하는 것은 즉각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뭔가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북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호 간에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후보자께서 임명이 됨으로써 이것이 북측에 주는 약간의 메시지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에서부터 그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교류 협력 예산 감소 내용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2023년에 1조 2000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부처 내용도 보면 교류협력국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국장급으로, 그냥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부처도 해당 업무를 하는, 교류 협력을 하는 업무가 완전히 축소되는, 실질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찌 보면 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해체하고 삭감한 남북대화, 교류 협력 관련한 조직이나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금 현 상태는 명백하게 통일부의 조직과 기구 그리고 역할,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걸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23년도에 1조 2000억 예산, 올해 8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행 액수는 2000억 남짓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통일부 예산은 없다시피 한 거지요. 그래서 조직을 다시 복원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평화관계 조성, 교류 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제도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이 별도로 좀 있으실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여야가 합의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맺었던 7·4 공동성명, 발효는 됐지만 국회 비준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1년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그리고 10·4 선언, 노무현 정부 그리고 4·27 9·19, 문재인 정부. 남북 간에 맺어진 6대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가 6대 합의를 묶어서 동의하는 것을, 이것은 법제화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한반도 전체로 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국정 100대 과제 중에 남북 간 기본협정을 추진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국회 비준이나 동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앞으로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 동의를, 그 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어떤 합의든 꼭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안정화 또 일관성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먼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한정애 위원**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잠깐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그리고 통일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연방전독일문제부라고 해서 괴뢰정부로 아예 동독을 규정해 놓고 사실 통일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동독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는 저 이름을 저렇게 연방의 양독일관계부 그래서 내독부라는 표현을 써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부처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 명칭 변경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관련해서는 저희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교류 협력이 일상화되고 평화 공존의 방식으로 나가야지만이 그 이후에 있는 통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초적인 작업으로서 주는 메시지로서의 명칭 변경 부분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은 철학의 전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철

학과 방향을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반공 통일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북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류 협력과…… 그리고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헌법적·법률적 통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35년 동안 공유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천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을 뿐이니까 이 91년에 이미 전환된 방향과 철학을 여야가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제정세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20년 전에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한반도 평화나 또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교류 협력에 큰일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과를 내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한번 성과를 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명칭에 관해서 방금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또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특히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현재 명칭이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조에서도 그렇고 66조, 69조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통일부의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듯한 또는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게 남북관계 악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꾼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말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홍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다, 통일부 이름을 바꾸는 것은 통일포기론이다 이렇게 보수언론 일각에서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1972년 10월 달 유신헌법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전 헌법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국토통일원은 그보다 3년 전, 헌법상에 평화통일 조항이 들어가기 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1969년 국토통일원이 설립됩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예를 들면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듯이 또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다음은, 저는 중국에 오래 근무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도 여러 차례 가 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 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 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 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북한 핵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이 정권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핵을 갖지 않아도 더 이상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지난 정권에서 해 왔던 식의 압박, 압력 이걸 통해서는 결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갈 뜻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특히 젊은 세대가 답답합니다. 지금 잠재성장률은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돌과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교류 협력을 재개함으로써 저는 희망의 돌과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등장하면서 서해안에 일곱 군데, 압록강·두만강에 여덟 군데,

동해안에 일곱 군데, 모두 스물두 군데의 경제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초심, 처음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우호적인 두 국가 관계,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협력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기원 위원** 짧게 한마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붕괴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북한 체제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먼저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인요한 위원** 또 한 가지 더 고마운 것은 바로 소통을,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제가 북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그건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민주당에서 제가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 할 때 저한테 아주 비겁하게 저희 병원에도 공문 보내고 전라남도 순천에도 공문 보내고 사람을 들추는데…… 민주당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를 볼 때 지금 우파 정부를 많이 비난을 하는데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제가 한 20분 브리핑을 드리고 그다음에 핵에 대해서 저한테 ‘우리가 잘만 하면 포기하지 않겠느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나라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아마 핵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로맨티시즘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문 정권 때 2018년 9월 20일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020년 6월 16일 날 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이런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북과의 로맨티시즘.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가 강한 국방 바탕에서 협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보유국이 됐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형태로든지 핵을 남한에 보유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저는…… NGO들도 다 실패했고 또 정부끼리도 실패했고 결국은 기업이 들어가서 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저도 찬성합니다. 단 방법론에서 많은 돈이 북쪽에 가서 좀 유감스럽다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지금 사람들이 지쳤어요. 남쪽에서도 많이 기증한 사람

들도, 개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 꿈꾸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먼저 인요한 위원님께서 정치를 은퇴하면 이북에 가서 우리가 기증했던 의료장비 수선 일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참 시급합니다. 왜냐하면요 2025년 7월 14일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의 핵시설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변에 5MW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섯 번 거기서 폐연료봉을 꺼냈습니다. 재처리했습니다. 플루토늄 만들어서 핵폭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강선에 있습니다. 네 군데 우라늄 시설에서 많게는 2000kg, 적게는 1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추출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점증하고 있는 능력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빨리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처럼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일관성으로 가면 우리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반도에 새로운 지평선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법적으로…… 그런데 사실 1년 동안 민주당보고 법제화 하자고 그랬어요, 통일로 가는 길을. 빌리 브란트한테 아이디어를 좀 빌리자. 그런데 반응이 조금 솔직히 미흡했어요. 민주당 위원들 오늘 많이 야단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이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한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궤도를 같이하는데요. 법제화, 앞으로 맺어지는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또 합의 체결 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6대 합의를 35년 지각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가령 라틴아메리카, 남미 비핵지대화 협정 같은 것은 아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26년 지난 뒤에 비준동의를 했고 미국이 국제인권협약(ICCPR) 그것도 이십몇 년 뒤에 비준동의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35년이 지났지만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시대의 9·19 군사합의까지 이것을 국회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법제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마지막으로 민주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이 두 나라 얘기를 해서 매우 저는 섭섭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가까운 관계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임종석 실장의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를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실리적으로 하실 건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하지 말자 그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그것은 저는 헌법정신에도 위반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합니다만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현실로서 원효대사가 말씀했듯이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가 아닙니다.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했고 그리고 세계 164개국이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수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이(不二), 둘이 아니다. 우리 헌법도 그렇고 언젠가는, 1300년을 함께 살았는데 80년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불일불이, 선현의 철학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트럼프.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늦지 않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간단하게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후보자님, 지금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길을 걸어 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개인적인 문제, 가족의 투기성 의혹에 대한 문제 또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스스로 ‘호구지책이었다’ 또 ‘위장전입이었다’,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지도자로서의 고민의 줄을 잠시 놓으셨던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순간부터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통령후보가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합니까? 참석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참석한 일이 있었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태호 위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1민족 2국가 이 부분을 실용적으로 사실상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이 말 혹시 어느 분이 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입니다. 저도 그때 그 내용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통일의 구심력을 결국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뜻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태호 위원** 저는 정동영 장관으로부터 기대는, 남북 문제를 푸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남남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69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13년 그리고 이어서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의 이른 동방정책, 한 20여 년의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다, 구심력을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1981년 콜 수상이 등장했을 때 이념적으로는 브란트 정권의 동방정책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실용적 관점에서 이 정책을 이어받은 것 그래서 교류 협력 정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킨 것,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념 성향에 따라서 엇치락뒤치락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통일과 멀어지게 하는 이 반대 상황을 보면서 남남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 방법의 협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역시 소통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역사를 칼이요, 거울이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현대사 100년,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가난, 그 양면의 칼이었습니다. 그걸 뚫고 나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거기 투영돼 있습니다. 거기서 또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미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독일이 갔던 길을 왜 우리는 못 가겠습니까?

○**김태호 위원** 말은 있는데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습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김태호 위원** 장관께서 행동으로, 그것이 개헌의 문제든 또 실제 칼을 잡은 힘있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액션 플랜을 과감하게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무엇보다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좀 더 힘있게 현 국면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남북관계 단절이지요? 완전 단절되어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완전 단절 6년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지요.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의 어떤 활용인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시각은 대중 견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속에서 앞으로 남북 문제의 물꼬를 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결과적으로 대중 간의 어떤 갈등의 고리를 풀고 또 우크라이나-러 간의 전쟁의 마무리 그 이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시점과 시기를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까 김준형 위원님께서 국제정치를 공부한 입장에서 지금처럼 대외 환경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다, 이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남북관계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 단절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벼랑 끝에서 저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우방도 동맹도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관세 전쟁과 자국의 국익을 위한 요구들이 드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과 호주의 참여를 요구했고 또 이후에 한국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의미의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택일의 강한 요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이, 우리 장관으로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말씀하신 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건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예.

○**김건 위원** 오전 중에 300여 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미동의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300건의 자료 중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후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이 300여 건 중에 단 한 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위원장님께서 꼭 반드시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고발한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기관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런

게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가 계속 제출되지 않으면 고발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오전에 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본 위원장이 오전 중에 후보자는 여야 위원들이 요구한 필수자료를 꼭 좀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김건 간사가 얘기하시는 300건이라는 그 제출 요구 자료 중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마 통일부, 여기 보면 필수 자료제출 요구 목록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 300건 중에서 이거라도 꼭 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고, 안 되는 자료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후보자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두릅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남의 땅이더라. 그 계약서 내라’ 해서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미 몇 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안 낸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가족들, 제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의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 건은 아침에 제가 지적한 그 300여 건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전 질문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그 한 건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석기 예.

○김영배 위원 아까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요청이 많이 된 거라서 본인들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 텐데,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뭐를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야 사실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개인정보를 다 포함해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따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대로 지나치게 개인 신상이나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치공세 식의 자료 요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부동산계약서 관련해서는 제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 이전을 못 한 것뿐이지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명이 된 것이고, 아까 나머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대부분 저는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건 간사님.

○김건 위원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안 온 자료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 위원께서 신청하신 자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목소리로 촉구해 주시면 좋겠고.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소유한 차량의 범칙금 부과 및 납부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10년간 후보자·배우자의 음주운전·과속 등에 대한 단속 적발된 기록이 있냐,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후보자·배우자의 기초질서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냐 이것은 검증할 때 그야말로 기초자료입니다. 이런 기초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사생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 보고 항상 지적하고 문제점을 짚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가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자료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314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중의 56개 필수자료라 해서 이것 여야가 의논한 것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의논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기 56개의 목록을 뽑았는데 여기 보면 가족들의 무슨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전부 제출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은 서면질의 답변서, 위원님들 책상에 두터운 두 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몇십 건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서면질의와 중복된 것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책자 보시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여야 간사님들이, 간사님 두 분이 이 자료 중에서 잘 판단해서 후보자가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딱 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려운 자료는 어려운 자료대로 정리를 해서 양해가 된다면 나중엔 끝나고 난 뒤에라도, 나중이라도 낸다면 이렇게 의논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 같고.

후보자께서도 김건 간사가 얘기한 대로 이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고발 사유로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사님은 의논을 하시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첫 질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먼저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남과 북 사이에 여러 합의들을 해 왔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중에 장관님 되시면 국회에서 함께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용되어 온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래 왔고 우리 한국도 일부 그랬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대립 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불균형성 또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 왔던 성과들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회담 및 합의 현황이 한 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김상욱 위원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가로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열정 또 문제의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실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난 지 30년 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것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넘어설 다른 체제 경쟁의 등장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자기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익은 뭐냐, 평화가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좀 초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면 좋겠다,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5대 합의서, 6대 합의서를 22대 국회 외통위에서 주도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 보기에다 참 신뢰가 가고 또 북에 대해서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논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사실은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북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긴장을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정착되면 국내 정치의 건강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겁한 정치지요. 늘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 우리 역사에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북풍 사건들 또 얼마 전 계엄에서도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단초로써 북한에 무인항공기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잘 열어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일부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 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통일부가 하고 있던 일들도 많이 위축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업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축소되고 폐쇄되고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 내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또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실익, 효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여쭙볼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효능감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 파주에 지역구를 두신 윤 후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아파트에서도 그 소음피해 때문에 호소를 하는 분들이 요즘은 발 뻗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런 효능감, 그러니까 평화가 되면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김상욱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외환죄, 내란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저는 이 내란죄보다 더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의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만일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망상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북 문제는, 평화 문제는 합의하고 뒷받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개성공단 재활성화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모두에도 저의 꿈의 좌절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허업이라고 한 JP 김종필 총재의 말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정치가 허업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저 스스로의 위안은 그래도 허업이 아니라 개성공단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 아니었는가,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거품이 된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되살려 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먼저 밝히신 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실질적인 평화공존, 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틀을 일단,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고 평화 체제를 이루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0년대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해 왔던 정책의 틀이 이루어졌던 환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간에 국력 격차가 엄청나게 났고 유럽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교류 협력에서의 어떤 스펬오버(spillover)가 정치·군사로 가고 통합을 이끌었던, 그 와중에 독일이 통일되는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와 유사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해 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면 한 당사자로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지금은 그 열여섯 자를 다 뒤집어야 할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 정세가 이미 굉장히 대립적인 상황으로 동북아에서 바뀌어 있고 이제 미국 혼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역학 관계도 우리의 경제력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힘든 관계가 되어 있고 국제 제재, 북한의 핵 문제 심화 때문에 국제 제재가 굉장히 촘촘해져서 사실은 교류 협력을 할 무슨…… 인도 지원 말고는 거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몇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 그 열여섯 자를 바꾸어서 정치가 경제를 선도하는, 선경후정이 아니고 선정후정이고 선민후관이 아니고 관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이 교류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당국이 정치 문제를 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민간의 사회 교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이 아니냐.

그리고 선공후득도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정서로 보면 상호주의의 동시 이행, 같이 주고받고 같이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먼저 줄 테니 나중에 주려면 쥐라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선이후난이라고 쉬운 것부터 하는 얘기도 해 봤지만 지금 쉽고 어렵고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풀어 나가는 문제……

제 입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고 북·미 대화도 얘기를 하시고 종전선언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 봤더니 딱 20년 전인데 2005년에 통일부장관 하실 때 때마침 부산에서 APEC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을 읍서버로 초청한다고 해서 추진하셨지요. 물론 잘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APEC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때 장관님으로서 아마 금강산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신 것 같다는…… 혼자 생각으로 합니다. 하는데, 딱 20년 만에 공교롭게 지금 경주에서 APEC이 올해 10월 말~11월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진핑 주석은 온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트럼프도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자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읍서버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4개월 뒤인데요.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또 국제 정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주 APEC 회의, 지금 우리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그걸 유치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기웅 위원** 다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통일하고 평화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데요. 우선 북한이 조선은 하나다 혹은 통일을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고 통일 관련된 조직들도 없애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탓이 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니요. 상대적인 거지요. 상호작용적인 것이지요.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적게 쓰자 혹은 좀 다른 용어로 쓰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관념에서 실용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김기웅 위원** 통일이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으신 건 맞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가 뜨거워지지 않은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김기웅 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 건데, 7월 3일 날 ‘통일을 얘기하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누가 흡수 통일을 당하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 정착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신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이고요.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해서 1단계 화해 협력 단계로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공든 탑이 파괴됐습니다. 이걸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기웅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경기도 시흥을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역임하셨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과 실천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가지신 그런 경륜과 철학이 지금처럼 이 한반도 상황과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부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적임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과분한 말씀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아까의 꿈과 그런 실천적인 의지를 갖고 장관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때 못 이루었던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나가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공동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끊임없이 열고자 노력했었고 그리고 현재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에 분단을 넘어설 다리를 놓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국정 분야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예요. 그것 공감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조정식 위원** 지난 25년간 다리를 놓아 왔던 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평양 상공에 드론이 떠다니고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상상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고조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지난 3년의.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의 화성기와 전단 살포가 신속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했지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최근에도 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는 뭐냐 그러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든 또 내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남북 간의 군사 직통전화, 핫라인의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새 정부의 철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9·19 군사합의의 복원 조치입니다. 선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대화가 막힌 지 6년인데요. 지난번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국면이 조성이 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에 부임하시게 되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정부 내에서 보다 강력하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이미 합의는 1991년 민자당 정부가 만든 기본합의서의 9조에 보면 무력 사용 금지와 침공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고 30년 뒤에 2018년 9·19 합의에서 지상에서 5km, 해상·공중에서 20km에서 서로 기동훈련이라든지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동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인데 통일부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어떠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데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평화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을 다시 신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 내의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대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회담 기능 복원입니다. 남북회담사무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권인도실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게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인권인도실로서. 이것을 다시 인도협력국으로 재조정을 해서 통일부 조직 개편을 다시 취하고 말 그대로 통일부를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주무부처로 되돌리는 것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통일부 직원 가운데 81명 정원을 줄였습니다. 남북회담사무국을 사실상 없앴고 교류협력국을 없앴고, 즉 개성공단 지원사무국을 없앴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없앴고,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요. 행안부가 정원 원상회복에 동의해 줘야 하는데 행안부는 한번 없앤 정원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데 아마 상당한 부정적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전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기능 전환은 적어도 교류·평화 협력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밑에 조정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축소된 인원 에 대한 조정 문제를 그다음부터 다시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 위원님 힘을 좀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여 년 전 통일부장관 하실 때 저는 좀 젊고 훌쩍한 의사로 통일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의사선생님으로 도와주셨지요.

○**차지호 위원** 예.

그리고 당시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장관님의 리더십 아래서 인도적 교류가 비록 그 당시에 좀 한시적이기는 했지만 평화로 이어지는 것을 봐 왔고 그래도 저도 의사의 길을 넘어서 인도주의 현장 활동가, 연구하고 이때는 평화와 과학기술, AI와 같은 영역들이 이런 분쟁과 낙후된 어떤 고립된 상황들을 넘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에 들어왔을 때 장관후보자님께서 평화 문제와 AI와 같은 과학기술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유사성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여 년 동안 사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북한만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가졌던 평화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고 또 북한 내의 과학기술도 핵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만 집중한 상태에서 커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분쟁을 지금 완화하고 해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수단으로 삼았던 제재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수단이기기는 했었지만 군사적 수단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써 왔던 것도 북·러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효용성을 잃게 돼 버린 상황에서 북을 대화 협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분쟁에서는 그 국가가 원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이라는 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북한이라는 국가가 자립

가능한 국가 혹은 그쪽 애기대로 강국으로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게 대화와 협력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차 위원님이 정확하게,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될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 북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과학으로 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 국가적 구호입니다. 과교흥국,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때 표방했던 과학기술 중시지요.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란 것이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 군데에서는 외부에서 수입해 온—아마 밀수가 되겠지요—그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는데 가장 절실하게, 전 세계가 지금 AI 혁명 북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많이 고립되어서 AI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개발도상국, 특히 분쟁지역에 있던 국가들이나 분쟁에서 회복하는 국가들은 지금 AI 기술이 다시금 그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자체 기술보다도 AI 응용 분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I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조금 더 성숙한 선진국보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성과 행정력의 미비 그리고 경제적 빈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던 도약들이 이 AI 기술로 인해서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한 내부에는 IT 인력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굉장히 폐쇄망이기는 하지만 내부에서 IT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고 이럴 때 AI와 같은, 특히 오픈소스로 움직이는 AI에 대한 접근성들이 북한 내부의 여러 보건의료 시스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지금과는 다른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이런 AI 기술들이 무기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오용되지 않게, 제대로 선한 AI 혹은 좋은 의미의 AI로 전환시킬 수 있게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게 남북협력 틀 안에서 가능할지 혹은 북한이라는 사회, 특히 북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AI 전환하는 그 그룹들과 연계시키는 방법들이 우선시되어야 될지 조금 많은 고민들을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이 관건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 과방위에 있으면서 퍼지컬 AI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경을 통해서 경상남도과 전라북도를 퍼지컬 AI 선도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예산을 국회 주도로 해서 통과시킨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AI 플러스 보건의료·재난·농업 분야, 이 선한 AI를 남북협력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일성대학 컴퓨터공학과 등등 해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를 우대하고 과학자를 우대하고 젊은 청소년들의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 연구원이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대 물빵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좀 되는 차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국면이 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지호 위원** 그러면 과학기술 기반으로 통일부 내에서, 통일부 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된 팀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앞으로 그 부분에……

○**차지호 위원** 그러면 과기부가 외교부랑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혹은 AI 기반의 평화외교TF 같은 것을 구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부의 남북협력 분야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챗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어두운 터널 속으로 간 상황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통일부장관을 맡게 되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터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이재강 위원** 유엔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소위 유니파이드 커맨드(unified command)라 하지요, 통합군사령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은 유엔총회에서 결정되어야만 하는데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조직일 뿐입니다.

실제로 1994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산하 조직으로 유엔사가 아니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사가 유엔기를 계속 게양하려면 유엔사의 업

무가 유엔 공식 업무이고 또 유엔사가 유엔의 조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사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지자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정전협정 관련해서도 그 임무로만 축소했습니다. 유엔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사령관이—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모자를 3개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또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려 하자 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정전협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유엔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서 남한 철도 차량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령부가 또 불허했습니다.

제가 당시 2020년 11월 9일이지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겨서 마련하려고 했을 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언덕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행정 업무를 계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진각 바람의언덕에서 43일간 집무실을 하면서 매일 통일대교에 가서 유엔사에 도라산전망대로 집무실 이전할 수 있도록 옮겨 달라고 1인 시위도 한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기자단도 DMZ 안의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유엔사의 불허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지금 파주시장도 대성동 마을에 가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 평화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유엔사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DMZ로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님, 물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전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밀리터리 인 캐릭터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전협정 서언의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서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43일 동안 평화부지사로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은 지금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DMZ 내에서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DMZ, 폭 2km, 길이 255km의 MDL 이남의 이 땅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미플루를 이북에 보내는 그런 인도적 지원 계획이 운송수단, 트럭이 유엔 제재에 걸린다는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하다가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것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하나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DMZ 내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 대한민국 주민을 만나러 가려는 것이 벽에 부딪혀서 못 간 그런 사례는 굉장히 유감

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외통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DMZ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안 별도 발의하셔도 좋고 이병진 의원안을 통과시켜 주셔도 좋고, 이 법률이 되게 되면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무난히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유엔사가 그동안 정전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쏟은 그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것은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실제로 유엔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실제로 정전협정도 엄격히 말하면,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은 군정위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전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에는 군정위가 있는데 이 군정위는 1994년도에 북한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최혁진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볼 때는 정치권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이신데요. 이번에 통일부장관후보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대가 큼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께서 언론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남북관계가 6년간 완전히 단절이 됐다’ 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데는 윤석열 정권의 탓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결국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열어 주시고요.

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다섯 번 이상 드론기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한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권에 대한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다음 장입니다.

통일부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날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은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내부 단속을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열어 주시면, 결국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는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또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될 통일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야 될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셨고 당시에 주가도 하락하고 경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6년간의 단절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미·일과 북중까지도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장관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특단의 조치를,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무인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내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외환죄조사단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와 정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10월 3일, 9일, 10일 날릴 때 중간 고급장교로부터 제보가 있기를 이것은 VIP로부터 지시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추궁했습니다만,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영정 부부장이 반박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공했구나, 무인기를 남쪽이 보내서 도발했다는 것을, 그것을 성공해서 박수를 쳤다는 군 통수권자. 그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의 방위 임무는 뭐였던가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과오로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과정이 바로 6년 단절을 잇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북이 수많은 위협을 했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최대한으로 늘려라 그리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의 그런 입장입니다. 남쪽을 향해서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난 3년에 대한 공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아울러서 장관께서 역할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호 전 장관 등은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내부 단속도, 기강도 철저히 세우시고 관련된 조치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열어 주시고요.

이산가족 상봉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주변국에 의해서 북한이 봉쇄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이산가족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품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특히 저는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보다 적대적인 시각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열어 갈 주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애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합의서를 기초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남북교류협력 관계에 있어서 민간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로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지금의 고통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개성공단을 처음 열었을 때 주무 장관으로서 피해받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경감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다시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통일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독일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동독을 2개의 국가로 인정한 이후에 독일 내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때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서 통일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첫째가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길러 주자는 것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하자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교육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필수 자료제출 요구 목록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요 전체 56개 항목 중에 24개 항목, 즉 43%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아까 정동영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제출된 서면질의서의 답변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 중에서도 혹시 더, 정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대부분 나머지는 보니까 개인정보거나 가족과 관련된 신상에 관련된 것이거나 이런 내용들이예요. 그래서 검증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더 추가로 또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리고 지금부터는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정동영 장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사실 한반도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국전쟁 이후로 거의 70년 가까이 그런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수출 통상 국가로 성장해 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자유주의 무역질서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수출 통상 국가로 입지를 굳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속에서 평화가 경제이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할, 위상 이런 게 강화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마찰이나 관세협상 등의 새로운 통상질서의 요구는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쇠퇴하고 이제 국가 단위의, 그야말로 국익 중심의 그런 현실주의 국제질서 체제가 등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궤적과는 다른 궤적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고립돼서 거의 아주 진짜 고립무원의 힘든 상황이 되면 결국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 시각에 의한 북한고립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는 상황도 되고 그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거의 북한이 사실상 지금은 완전한 고립 상태로 부터는 어느 정도 탈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안보질서의 새로운 구축,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장관을 맡으신 건데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APEC이 10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APEC에 소위 미국, 중국 등 일본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APEC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APEC에 참여하는 정상들도 분단국가 한국에 와서, 천년고도 경주에 와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 또 시진핑 주석, 한반도 주변의 아주 큰 행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새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미 한일 정상회담은 제삼국에서 가진, 캐나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 네 나라,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정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런 바탕 위에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4개월 동안 적극적인, 외교의 시간입니다. 이 외교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APEC이 분단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도에도 그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을 쏘 대던金正恩을 향해서 ‘로켓맨’ 그다음에 ‘화염과 분노’ 이런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 내면서 2018년도에 있을 평창올림픽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김여정 일행들이 평창올림픽에 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야말로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히 소강상태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APEC 때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함께 외교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용기, 상상력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마침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외통위 위원장님이시니까…… 특히 이진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다 공감대를 가진 내용이어서 정부도, 그러니까 삼자가 다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지만 분위기 조성,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점에서는 저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님, 그때 만찬 자리에서 뵈었을 때 APEC 준비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총리에게 APEC 시설에 대한 현황을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날 마침 김민석 총리가 경주 현장으로 달려가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게 외교부 업무만이 아니라 전 부처,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처들과 힘을 합쳐서 시설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략적으로, 정말 국가 수준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여야 함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던 경험 그리고 경협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독대했던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지신 후보자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아주 적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이외의 어떤 별도 구상 같은 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우선 APEC 준비와 관련해서 경주를 아직 못 가 봤는데 청문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김석기 위원장님 모시고 경주에 가서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현장을 먼저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확인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방 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과의 협의라든가 다른 어떤 조치나 보장책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서 복원을 하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이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장관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되는데 아직은 후보자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9·19의 효력 정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 완전 파기를 선언했고요, 역순으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건 위원** 제가 ‘10년 후 통일’이라는 대담집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서,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분단 질서 속에서 기득권자가 분단 상황이 변하면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방해하다 보니 우리가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물론 주로 국내적으로, 우리 국내의 그런 기득권을 말씀하신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김 씨 일가야말로 분단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남북관계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존재했던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북을 남이 이용하고 남을 북이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합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흡수통일론을 폐기했고 반공통일론을 폐기한 셈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형식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담보되지 않은 측면이 시기적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34년간 유지되어 온 기본합의서 체제를 다시 새 출발,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득권, 분단 상황이 변하면 기득권을 잃을까 봐 지금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 씨 일가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제 생각에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그런 경험 아닌가요?

○**김건 위원** 저와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요 지금 9년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작년까지 열네 차례 국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나 정책개발 업무는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황인 거 잘 아시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론적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도 대북정책 일관성, 특히 남남협력, 우리가 하나된 대북정책 이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례적인 공문 발송을 넘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단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행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북한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4대 자유를 얘기할 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병행해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에서 추진해서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북한인권 업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자체를 안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께서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고 그러면 계시는 동안 꼭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냉전이 잔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틈타 북한은 신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냉전시대와 유사한 군사협력관계로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무엇보다 안보를 중시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해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잠깐 메모를 하다가 놓쳤습니다.

○**김건 위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것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건 위원** 이런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결국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윤후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륜도 많고 또 지혜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세월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회한, 어려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 번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2018년 9·19 때, 야당 대표로 그때 갔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자녀가, 김주애라는 딸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그 딸도 본 적이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북한에서 행사를 하면 그 딸이 등장을 자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딸이 행사에 나타나는 게 후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글썽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에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서 얘기할

때 그걸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안전만 보장된다면 우리가 왜 세계로부터 제재니 뭐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딸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하는 것은 같이 살자, 평화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 나눈 것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 언론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속내를 얘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것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심은 ‘우리도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입니다마는 북한 지도자에게는 본인이 등장하면서 약속했던,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북한 경제를 회생·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식 위원 질의에도, 김진 위원의 질의에도 답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국민에게 좀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후보자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복원시킨다고 의결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부차관이 이 자리인가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질의 하니까 9·19 군사합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은 조치들부터 시작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후보자께서는 9·19 군사합의가 물론 국방부, 또 국방부장관후보자한테도 좀 조율하고 말씀을 하신 건지 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갖고 이렇게 단호하게 국무회의에서 복원 시키면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순전히 제 개인적 차원에서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은 조치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9·19 합의 정지에 따라서 원래 9·19 때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또 유엔 그리고 한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중첩이 됐어요. 꿈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대북제재에 의해서 뭘 하려면.

그런데 이제 나온 것이, 인도적인 지원도 사실은 그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이런 대회는 그런 제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해 냈지요.

그런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양궁이나 탁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꼭 막혀 있을 때 문화·체육·종교 분야에서 교류가 물꼬를



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의 지도자가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규정했습니다. 인도주의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정치·군사 문제입니다. 정치·군사 문제에서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을 지금 북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약속 지켜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오전에 후보자께서 가족들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번 청문회 자료에 재산신고를 통해서 총 21억 97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7억 상당의 도곡동 아파트 그리고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예금 3억 원, 채권 약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저는……

○**유용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맞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는 2020년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40년 전 제가 MBC 기자였을 때 조합주택으로서 분양받은 것이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핵심 재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핵심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장·차남의 미국 유학 및 거주 이력인데요. 장남은 학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가량 되는 미국의 정말 명문대 학부 및 로스쿨에 오랜 기간 유학을 하였고 현재는 약 3억 1000만 원 정도의 고액 연봉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남 또한 미국의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계신데 2억 2000만 원의 연봉을 신고한 것으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가족의 태양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오전의 답변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났는데 댓글 중에도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가끔 공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공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고액 연봉자입니다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손을 벌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저의 공인으로서의 기본 철칙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배우자분께서 현재 한국형 FIT 한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 분양은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FIT 제도는 정말 농어촌에서 어렵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의 혜택을 보고 계신다는 점에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신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고 태양광 시설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비리나 주문이나, 재산과 관련해서 주문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나름대로는 자기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귀향·귀농 했을 때……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북한이 네 곳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그동안 1300에서 한 200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해커 박사의 추정은 1300kg고요 또 미 국방부 당국자라든지 또 싱크탱크 등에서 나온 것들의 범주가 적게는 1300kg 많게는 2000kg로 추정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공개 정보를 종합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공개 정보입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저도 군사전문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 정착,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무려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 횟수는 처음 들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이런 남북 간의, 특히 군사적 분야의 합의는 상호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겼는데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또 그쪽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살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위협입니다.

○김기현 위원 위협일 뿐인 것입니까? 단순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을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200만 명이 다녀오고 개성공단에 저희 기업이 25개……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됐어요. 제 질문시간이니까요.

북한이 선의로 안 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에 그러면 무인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김기현 위원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리고요 이것을……

○김기현 위원 아니, 정찰하면 안 된다고……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김기현 위원 의도는 후보자 생각인 거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외환죄 수사단에서 밝혀질 겁니다.

○김기현 위원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고고도 정찰은 되고 저고도는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고고도 정찰 비행도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김기현 위원 그러면 북한의 동향을 탐지하지 않고 북한의 선의만 믿고 있자 이런 말씀이시구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평화가 선언만으로, 대화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일부러 도발을 자극해서……

○**김기현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햇볕정책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회피하시잖아요.

평화가 선언과 대화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평화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 그리고……

○**김기현 위원** 두 가지를 다 말씀……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대화와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위원** 북핵이 이미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북한에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여섯 번의 핵실험 가운데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합니다. 반성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술을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하면 총을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라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잖아요.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위원** 쓸 필요가 있고 없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지요. 후보자가 판단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리 국민이 판단합니다.

○**김기현 위원** 참, 그렇게 평화가 왔다고 말로 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니까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전작권 환수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작권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2021년인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시지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포괄적 협상 카드로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의 하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의 자료도 보시면 마찬가지로요. 국회 국방위원장 재직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안규백 후보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의 방위 태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개정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시작전권 가져오는 것이 독립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이 목표였고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연기를 했었는데……

○**김기현 위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제 조건부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 앞에 자료 보여 주시지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폭풍에 관한 겁니다.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현재 18개월 복무해야 될 것이 24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어서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불안해져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인공위성 통신 감청, 온갖 군사 동향, 전략자산 운용에 대해서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부담될 것이라라는 것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져오는 후폭풍입니다.

이런 후폭풍을 다 예상하시고 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동맹도 필요하고요.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김기현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하신 적도 있는데 저도 북한인권법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우리 내부 정치적으로 또는 그제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유독 북한인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윤 정부하에서. 2023년에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한다면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2년에 걸쳐서 준비한 통일 독트린 내용 또한 북한자유인권펀드,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개편이 됩니다. 전혀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그 내용들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보니까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3급) 받았더라고요. 양금덕 할머니는 받지 못했던 국민훈장 모란장(2급)과는 급수 하나 차이입니다. 통일부가 지금 하는 일은 보면 사법적, 국제형사법적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자 남북대화를 시작했을 때 북한 정권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이렇게 북한인권이라고 주목해서 공세하듯이 활용하는 것, 남북대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안 됩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조직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것을 보면 흡사 통일 이후 기소를 대비한,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증거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 표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 대한민국과 동질화될 수 있고 국제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법은 이미 의원실에서 수 해 전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부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이라는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 보는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중국의 인권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컸습니다

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한 뒤부터 전면적인 개방 이후에 어쨌든 인권 수준은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후보자의 말씀은 물론 중국이 지금 인권 실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과거에 비해서는.

○이재정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재정 위원 맞습니다. 다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듭 인권침해 상황이 없더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정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역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계속 의식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북한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국가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시작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 내부의 합의를 모아서 개선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영원한 논쟁인데 북한은 한 민족인 동시에 두 국가론이라는 건 어느 정체성 하나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준형 위원 그것이 아무리 김정은이 그렇게 두 국가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한 민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들이 이 이중 정체성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는 운전자인가 중재자인가인데요. 당사자인가 중재자인데 이것 역시 둘 다 맞는 거지요? 우리가 북·미 화해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김준형 위원 이걸 한쪽으로 빨리 정리하라는 어떤 조바심을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냥 북한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아까 예로 드신 독일의 예는 사실 우리 한국이 지금 합쳐서 그 당시의 독일이 부활한다는 그런 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신부나 행안부의 명칭

변경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임동원 이사장님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는 것은 저는 다른 걸 붙이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통일이라는 말은 빠지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완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가슴속에 있는 거고요.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은 불변입니다. 물론 개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따라서 아까 이중 정체성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불일불이, 제가 원효대사 말씀을 자꾸 인용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축소·왜곡된 마당에서 한반도부로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산림 문제, 보건·의료 문제, 재난 문제 등등 통일부의 영역과 역할이 굉장히 넓어지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저는 여전히 통일부라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바꾸고 내용을 강화하는 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일 포기에 대한,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하지 말고 분단을 하고 살자고 하는 시점에서 그게 과연 적절한 시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남 갈등 해소라는 부분이 저는 동의하면서도 계속 죄송한 말씀이 약간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김태호 위원님이나 인요한 위원님처럼 초당적이고 전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적대적 공존이나 군사 경쟁이라든지, 저는 오히려 후자가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훨씬 뿌리 깊고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호소에 계속, 호소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2018년 여론조사 때 도보다리가 있고 판문점이 있고 싱가포르 했을 때는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80% 90% 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쓸데없는 논쟁으로 힘을 빼지 마시고 9·19라든지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기 있게 하고 성과를 이루어 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을…… 쓸데없는 데 정치적 역량이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회창 그때 한나라당 총재와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고 한 결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 공통분모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결기 있게 이루어 내라는 말씀도 맞고, 그러나 여전히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저는 김기현 위원님에 이어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앞에 있었던 일들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가장 최근 일만 말씀드리면 바



로 지난주 수요일이지요, 7월 9일 날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관세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논란이 이어지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고 장기적 현안일 뿐이다’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께서 지난 2010년 6월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에 대해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전작권 환수 연기가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2010년 입장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약소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세계 군사 강국 5등 6등을 헤아리고 있고 국력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거의 필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주意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만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는 당연히 자주독립국가로서 작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면 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실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것은 현실 조건, 지금 남북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지금 우리로 보서는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통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철수 위원** 안보와 정말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전작권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한미 연합작전 태세가 약화될 것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자산의 높은 미국 의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유사시의 포탄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 최소 21조 원은 있어야 이 전작권 비용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우려 그리고 또 전작권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것도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지금 말씀한 대로 국제적인 환경 또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수의 방향은 맞고요.

○**안철수 위원**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상과 현실이 결합해야 합니다. 이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21조가 사실 이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이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2007년이었지만 환수 시기는 2012년으로 못박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환수하겠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그냥 안주하느냐 이 방향성,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철수 위원** 그러면 5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5년 내에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저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저는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작권 환수는 일정이 특정됐다라기보다도 조건에 기반해서 환수가 추진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재명 정부는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했던 세 가지 조건은 현재로서는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마 무한정 끌지 않고 조건을 신속하게 갖춰서 저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용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법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부각되고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특히 국내외적으로 공개되고 널리 홍보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2023년과 24년에 발간이 됐더군요.

○**이용선 위원** 예.

윤석열 정부가 22년 5월에 집권하고 그다음에 23년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를 지시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영문으로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대통령이 4월 방미 시 하버드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이 상황들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남북 직통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기도 하고 또 북한은 여기에 맞상대한다고 해서 인권동토대를, 소위 한국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책자도 발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직 못 봤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심하게는 40여 년 전 사건부터, 적어도 최근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많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증언들이 구체적 시간과 장소도 없기도 하고 또한 북한이 금지하는 반동 사상 행위로 선글라스 착용 또 여성의 장신구 착용 등등을 적시해 놔는데 알다시피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이 보면 선글라스 착용이 무슨 반동 행위…… 말도 안 되고, 최근에 북을 다녀온 여행자들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공공연하게 쓰고 다니는 것 중 하나지요. 즉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엉터리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내용이 신뢰성에 있어서나 현장성,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나 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중에 또 심각한 것은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이 공개처형됐다’ 이렇게 했고 저희도 국감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서 북한인권보고서의 홍보물을 인용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부와 국정원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북한을 반인권·반인륜 정권으로 낙인찍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홍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작비만 1억 8000~9000, 홍보비는 18억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거도 없고 엉터리투성이인 정치 공세로 만들어지는 이런 인권보고서를 계속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적하신 문제점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금 발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도 발간된 인권보고서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그것을 발행해야 하는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 문제도 많고 목적도 매우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대안을 줘……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청문회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4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에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제가 우리 후보자에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오후의 답변을 제가 유심히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평화, 대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전쟁을 대화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우리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위원장 김석기 이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고 그간에 조사도 있었습시다마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무원이 살아 있을 때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출하라든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대응도 없었습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은 참 참혹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체 접근이 차단된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기민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이 사망 이후에 정부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해경정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확인된 것이 이미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해경정까지 동원해서 그걸 수색하는 일종의 쇼를 했습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 이렇게 몰아간 사례가 있었습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두 사건 모두 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습시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됐는데 1년 9개월 만에 북한에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특별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 447억 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시다. 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환수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 당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19 선언까지, 바로 엇그저께까지 한반도의 평화의 급물살을 목격하던 그런 입장에서 불과 1년여 만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나 그 전에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있어서 북이 배신감을 토로했던 그 연장선상에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상 간의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신뢰가 구축되고 있었는데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봐도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전작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주독립국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대화정책은 좋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그러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욕적인 남북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호혜적이고 상호 인정, 존중하는 바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강서병 한정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북측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서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을 때도 정부에서는 항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물론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 대강이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냥 간단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위기 협력과 관련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1년에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선정한 기후변화 대응 취약 우려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

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국제기구에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2015년에는 COP에서, 2016년에는 유엔총회 파리기후협약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1년에 SDG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는 8%를 줄이겠다, 16%를 줄이겠다, 가장 최근치는 한 15% 정도밖에 못 줄이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할 경우에는 훨씬 더 과감하게 절반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저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국제기구에 북한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렇게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할 경우에는 저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범정부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만, 환경부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통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환경부장관을 지내신 한정에 위원님다운 말씀이신데 새 정부의 환경부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또 저 역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환경부와 깊이 논의해서 남북협력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이게 올해 4월 11일 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 11일이면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원래는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으로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추진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주민 접촉하는지를 통제하겠다. 그동안 신고로 유지해 왔던 것을 거의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2023년 성과.

그리고 2025년의 정책추진 방향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 그게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차관 상황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것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다음 게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남북관계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발신하겠다. 이게 결국 북진 통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도 보지 아니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세우는 시행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국회 보고도 건너뛰는, 2025년 시행계획은 형식 면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2025년 시행계

획을 폐기하고, 원래는 정기국회 이전에만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계획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살펴보고 국회에 보고한 뒤에 고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후보자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직접적인 촉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NATO 가입 추진이지요.

○**홍기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도 했었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추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고 있는데.

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것도 비슷한 거지요? 이란이 핵무장 또는 핵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그것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후보자님이나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인데 북한이 장사포를 쏘 필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그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 본래의 뜻은 국방은 국방대로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무인기를 평양에 의도적으로 보낸 것으로, 정찰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는 수사를 더 해 봐야 나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북한에 우리 군사용 무인기를 보내고 그게 북한한테 적발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북한의 맞대응을 초래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한반도 평화는 완전히 깨지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평화 분위기 조성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위 포를 쏘 필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자 이런 얘기

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국방을,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력 충돌이나 전쟁은 작은 이유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말 국방을 책임진, 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려고 하는 게 자존심 때문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자존심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자주독립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유엔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작권 추진에 대한 원칙, 이미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한 것이 지금 13년이 경과했잖아요. 물론 그사이에 핵실험과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세 가지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만 ‘세 번째,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 주변의 역내 안보환경 조성될 때’, 그러니까 주변의 정세가 안정될 때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이것은 물 건너간 얘지요.

○**홍기원 위원**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은 자존심의 요인도 조금 있겠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또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겪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무 카드가 없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지요.

○**홍기원 위원** 예, 트럼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전작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갖고 있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하는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만큼 국방력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동의합니다.

○**홍기원 위원** 우리나라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 물론 미국이 동맹이니까 믿고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작권 환수는 분명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저는 외교통일위에 와 있는 이유가 북쪽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한 사실이 있어서 장관님하고 많이 대화가 되는 것 같고, 또 외교는 실익입니다. 그리



고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인요한 위원 몇 가지 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연락사 무소가 폭파된 것은 문 정권 때 일어났고 후보님께서 무슨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리한 약속을 이행을 못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북쪽에 갈 때는 늘 노력하겠다 약속을 안 한 게 큰 성공의 원인이었습니다.

장관후보님한테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첫째, 개성공단에서 손해 본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계약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도 보상을 좀 도와주셨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인요한 위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혹시 북한 포로가 제삼국이나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으면 길을 터 줄 수 있는 어떤 자유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보기가 아주 힘들었던 것은 문 정권 때 강제로 북쪽에 이렇게 보내는, TV 뉴스 카메라에 많이 나왔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북쪽으로 다시 재송환되는 것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저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생각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당할 게 뻔한데 그런 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인요한 위원 그다음에 도움을 청할 게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이 됐는데 대북 소액 송금, 북쪽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자기 가족한테 보내 줄 수 있는 법령을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 통일부에서 그것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큰돈 아니고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자기 가족한테 합법적으로…… 너무 많이 브로커한테 뜯기고 너무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경찰 조사들을 많이……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인요한 위원 그다음에 지원 중에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북제재 때문에 세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산물하고, 농업에 관계된 것하고 그다음에 약하고 세 번째는 식량입니다. 그 외에는 뭘 보내면 다 제재에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10년 동안 법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북쪽에 지원하기가.

그리고 유엔 기구 통해서 지원을 좀 하시겠다는 의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유엔한테 1달러를 주면 현지에 10센트 도착합니다. 전부 인건비로 써 버립니다. 유엔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기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알기로는 30% 행정비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아, 그래요? 많이 좋아졌네요, 제가 알아볼 때는 겨우 10%만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남포를 통해서 물건 보낼 때는 90%가 갔습니다. 10% 미만만 우리가 떼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전적

으로 남북, 특히 북쪽에 대한 교육이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오늘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이 계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연방제 체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통일이 계획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일위에 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법령이나 여러 가지 것을 미리 준비해서 통일을 확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인요한 위원님께서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농산물, 약, 식량 이외에는 다 제재에 걸린다.

그런데 예컨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1등 하는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 보시면 거기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열광하는데 케이팝, K-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북촌, K-푸드 무슨 김밥 라면, 미국 자본이 한국의 한류를 애니메이션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전 세계가 즐기는데 북한만 예외지요. 그런데 북한도 우리 남쪽 사람이랑 똑같은 지적 능력과 두뇌 능력, DNA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이런 한류 확산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6년 동안 지금 남북이 완전 단절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었던 접근해야 되고 그 접근은 평화와 실용적으로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태호 위원**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만나면 그 속에서 마음에 어떤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남도지사 시절 평양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과 교류를 했고 그 주민들과 교류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작고 크고를 따질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류가 시작돼야 되고 쉬운 것부터 또 민간부터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저는 동의하고 또 후보자님께서 그런 길을 좀 과감하게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경남지사 하시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모범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아까 휴게실에서 들었습니다만 DMZ를 비행기로 넘어간 사람은 처음이다 하는 말씀 듣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금강산 관광 중단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입니다. 후보자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개성공단의 초기 운영에 대해서 또 관리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신 분으로서 의지가 남다르고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참 안타까운 건요 2019년 1월이지요,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재개를 원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을 때 그리고 2월 28일 날 하노이를 두 달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개성공단 사업주들, 사장님들이라도 개성을 방문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그런, 금강산 관광이 아마 개성공단보다는 조금 더 재개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 부분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건, 실제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정말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손배소 문제 또 재발방지 대책, 사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미래로 우리가 열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발 방지와 동시에 이제는 남북의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과감히 열려야 우리의 지렛대 역할도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남북의 문제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전작권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당연히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국방에,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해 간다는 그 인상은 우리 젊은 영혼을 파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지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자에 대한 믿음 중의 하나는 좀 더 결단을 가지고 또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역할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 다른 행보로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시고 영향력이 크신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당적, 남북 문제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조와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듣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지난 정부의 계획으로 통일부 진행 사업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장관 되신 후에 무에서 유를 또 망가진 것을 다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큰 책임을 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거 대상으로 보는 시각, 또 하나의 시각은 실질적인 두 국가이나 당위적으로 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시각, 어느 시각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해법은 완전히 다른 색깔

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거듭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제 관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북이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우리가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정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법제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 박정희 정권 때 7·4 성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까지 6대 합의를 국회가 뒷받침해 주신다면 이게 아마 남북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독일 통일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말씀하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쭙본 것이, 보면 북한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 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바로잡아 가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이 심해진다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해서 혈맹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용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북한이 이용되어 버린다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이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버린다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쟁 대리전을 겪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 구축은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반드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북한에 무인기가 간 것은 그 신뢰 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일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이 되신 후에 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에서 북한에 무인기 보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라도 열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장관 되신 후에 북한에 특사라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국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드러난 것이 작년 10월 3일, 9일, 10일 그리고 11일 날 발견된, 네 차례 무인기를 보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말이 밝혀지면 우선 사실관계 확인,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경협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엔 제재나 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재들 때문에 현실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제재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금 이중 삼중 사중의 제재 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2010년 5·24 제재 같은 것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풀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국면이 되면 이것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먼저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제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제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되신 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북한인권보고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면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과 하위법령에서 ‘정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상호적인 관계 혹은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누가 잘잘못 했다고보다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꿔 가야겠다라는 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분명히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아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기억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상회담을 세 번 하고 평양 선언도 하시고 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회담 수도 적고 이산가족이나 교류도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끊어졌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끊어졌냐? 그것도 평양 선언하고 9·19 군사합의 하고 직후에, 정확하게 9·19 군사합의 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남북 간의 모든 대화와 교류 협력이 단절되고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갔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뭐 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미·북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충분히 잘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상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문재인 정부는 5년인데요 첫해에는 북이 핵무력 완성으로

질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두 번의 핵실험 이후에……

○**김기웅 위원**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2018년 10월 이후에 남북대화가 끊어졌고……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임기가 5년인데 첫 번째 1년은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였고 마지막 3년은 코로나로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열려 있던 공간이 1년 내지 1년 반밖에 없었지요.

○**김기웅 위원** 아니, 2018년 10월에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기웅 위원** 그리고 교류 협력도 다 끊어졌지요. 그 원인이……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김기웅 위원** 코로나 때문에 끊어져서 대화가 안 됐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완전히 막혔습니다. 20년, 21년, 22년.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국 간 대화가 2018년 10월에 끊어졌는데 9·19 군사합의 한 달 뒤잖아요. 왜, 9·19 군사합의 이렇게 좋은 합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단절로 갔는데, 그건 팩트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측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었느냐, 혹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북한 지도자와 친서 교환이 되는 등 지도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다만 9·19 직후에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북·미 하노이 합의에 연동시킨 것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핵 협의는 협의대로 가되 남북관계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간과 공간을, 5개월입니다. 5개월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 뒤에도 아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김기웅 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하긴 할 텐데 지금 약간 좀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미·북 관계와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실책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미·북 관계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더 갔어야 된다고?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리는 금강산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공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이후였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거네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지요. 너무 동맹의 눈치를 본 거다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후보자님, 남북 민간교류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7건이 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공식 채널, 정부 간 채널이나 공식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서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꽤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데서 통일부가 앞으로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다양한 분위기라든가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같이 좀 나서 주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 이에 대한 의견과 또 어떤 구상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신고제와 허가제는 명백히 다릅니다. 신고제를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민간교류의 접촉을 막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통일부장관 할 때도 단 한 건…… 사실상 거의 민간교류 신청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변화를 통한 접촉 또는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동방정책의 핵심 원칙이 우리의 햇볕정책에서도 관철됐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간교류의 원칙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제는, 그것을 정부가 심사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민간교류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조정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폐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

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난 시절의 통일부는 현재 판결을 자꾸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방치 내지는 조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부가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 주체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계된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 보면서 이번에 보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정법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조정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군사·외교적 긴장이 우려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조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문제에 꽤 나름대로 실효적인 법안이고 현실적인 입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현재가 전단 발송 금지를 남북관계발전법에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금지가 가능하다.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한 건데, 현재가 그 판결을 하면서 적시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입니다. 현재가 그 두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두 법을 들여다보니 구체적으로 집시법과 경찰관법에는 대북전단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경찰의 신고 의무 그리고 경찰이 불허했는데 이것을 강행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41명의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실제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적 요인이었거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한테 지적을 했던 건데 통일부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사실 34년 전 기본합의서 3조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게 뼈라 보내지 말라 하는 얘기였거든요.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대북전단 살포 이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니까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어쨌든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았습니다. 당장 통일부 전 장관이지요, 김영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뉴라이트 학자 모임 ‘교과서 포럼’ 참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일부 조직 개편으로 남북 교류 관련 주요 부서 통폐합 및 81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셨는데요. ‘미국이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네요. 또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에는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 지금 우리가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민 5000만이 주권자가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는 분이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관련 인사들이 과연 통일부 관련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다수 포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주시면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니까 통일부와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부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호숙 대표, 리박스쿨 대표라고 알려진 분이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전 민주평통사무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지요. 손호현 씨는 해외 상임위원인데 이분도 아주 곤란하신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셨는데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은 같은 조직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음 PPT 주시면요.

통일부 산하 위원회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이지요. 이영훈 씨, 이분이 지금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된 성노예설’ 이런 것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좌우가 없

고 진보 보수가 없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십분, 백분 공감을 하지만 이런 혐오와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일 관련 업무의 중심축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있고 중도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까 보이텔스바흐 협약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의 견해를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비판적 사고를 길러 주는 것이 민주시민사회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라이트 일색으로,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 어떤 활동하는 분들이 배치돼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다음 PPT 보시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영훈 씨는 강원연구원 포럼에 가서 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좌우합작 이후 북한처럼 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음 PT 열어 주시고요.

통일부의 그동안의 인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한별 씨라는 분이요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이분은 지난 계엄 선포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안전까지 발의한 바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려 통일부 소속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 위원회는 정부 쪽 인사들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그래도 나름 비중 있는 자리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이렇게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요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제가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런 남북관계 교류 협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극우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인적 쇄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말씀하신 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 주는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연기하거나 축소할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8·15 한미 연합훈련, 오늘 보도를 보니까 8월 18일부터 11일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도한 군사비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게 되면 NSC의 일원으로서 외교·국방·통일·국정원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심도 깊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남북관계발전법 너무 잘 아시니까, 남북관계발전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대한민국은 법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시대, 북한을 괴뢰로 규정했던 시기입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시대, 일단 반국가단체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서로 장사는 하자,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이런 취지의 협력법 시대가 90년대 이후에 30년 지속되다가…… 15년이군요. 15년 뒤인 2005년 당시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법적 제도화입니다. 남북관계 기본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야 절충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타협이 됐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남북관계 역사에서 법제화의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안하고—물론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겁니다만 당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살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과 대응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입법, 제대로 된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후보자님, 인도적 지원 부분과 경제제재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사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인도적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가 있지 않았는데 사실 인도적 지원이 왕성하게 되는 나라조차도 실제 그 나라 건강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자원에 의해서 바뀌게 된 부분들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전체 의료비, 그 나라 국가 전체 의료비 안에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도 외부에서 오는 지원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포션,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그 나라 경제에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외적인 정책 환경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경제제재가 2017년 이후로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어서 그게 북한에 있는 정치적 엘리트 그룹들만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북한 주민 전체가, 특히 북한 주민들 중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들이 경제제재의 영향들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한쪽 면에서는 북·러 동맹으로 인해서 경제제재 효과가 없어지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북핵 문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경제제재 자체에 대한 어떤 후퇴가 쉽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는, 북한 주민과 우리는, 잠재적 통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남쪽의 입장에서 적어도 경제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특히 정치 엘리트 그룹 말고, 건강 문제나 아니면 식량 문제나 이런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제재가 가진 부정적 인도적 영향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돼 있지도 않고 엄밀한 조사가 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떤 인도적 지원이 경제제재 아이টে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고, 전체적으로 경제제재가 주어졌을 때 북한과 같은 나라가 식량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의료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필수의료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북한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 그룹뿐만이 아니고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북한 주민의 그런 인도적 측면에서의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28일, 핵 문제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문제입니까, 한반도에서?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대신 북이 요구한 민수용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만일 받았더라면, 네오콘이 이것을 방해하지 않아서 만일 영변 핵 폐기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루저 루저가 된 셈이고 원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 핵폐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가 저는 열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안보 문제에 의해서 경제제재에 동참을 할 때는 그 경제제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가장 소외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분들을 고통으로 안 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시작이 이 경제제재에 대한 정확한 평가, 건강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식량영향평가라든지 정교한 평가가 일단 한 축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에 기반해서 조금 더 선택적인 제재 그리고 가장 소외된 그룹들한테 피해가 완충될 수 있을 만한 형태를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팬데믹 때 경제제재와 팬데믹의 이중 효과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양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북·러 동맹 속에서 또 지금 유엔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북쪽의, 북한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민간교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민간교류가 약간 굴곡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민간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꽤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급격하게 그 예산이 축소가 되고 또 지원 방식이나 지원 대상도 많이 변경이 돼서 예산도 반토막이 나고 지원단체들도 보면 특정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단체들에게 집중이 됐다. 그래서 극우 성향 단체들이나 그동안에 통일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잘 걸맞지 않은 그런 단체들에게 예산이 많이 나누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들어 보니까 23년도에는 6.3억이었던 게 그 뒤로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화협의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온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편향적인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예산의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노무현 정부 때 민간교류 신청이 4000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00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20건, 건수도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화협에 대한 지원도 4분의 1로 줄었듯이 사실 민간 영역이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 내려면 예산 지원도 다시 정상 회복, 원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오세훈 시장이지요—북한인권 서울포럼이 열리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강사로 오시려고 했던 분이 모스 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해서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으로 복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언급을 했던 사람은 2022년도에도 이런 사실을 적시했다가 벌금형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은 완전 가짜뉴스인데요. 이런 극우 성향이기도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와서 북한인권 포럼의 강사로 온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이 비판 때문인지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행태들이 결국 북한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사실상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좀 폄하하고 대한민국 선거를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북한인권 행사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행히 그 행사를 취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저는 8·15 독트린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을 때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도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자유의 북진 이런 개념을 이야기 했었고, 세 가지 틀로 여러 예산을 동원하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유의 북진 이후에 급격하게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민적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자유의 북진 또 자유에 의한 북한 주민 해방을 8·15 독트린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자유에 의한 북한 주민의 해방, 결국 반공통일론·붕괴론인데요. 미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 적대를 불렀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전됐는데요. 이것은 또 급기야는 마지막에 이 자유의 북진이 어떻게 변형되냐 하면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자유의 북진으로 역행했던 반공 통일론·붕괴론·흡수통일론으로 연계했던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새로

운 출발은 7·4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6대 합의를 복원하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소공동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이 이 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출발이다, 실용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후보자님,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을 읽으면서 후보자께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얼마나 북한이 절박하면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면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큼 북한도 최소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의 체제, 우리를 최소한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균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우려 들고, 그게 꼭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더 큰 남북관계의 후퇴만을 초래하게 되는, 이제까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북한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서로에게 간섭을 안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남과 북은 선 대 선·강 대 강, 서로 상호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도 그렇지만 북은 사실은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 다만 그러나 급진전되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급변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 감정적으로 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꼭 이것은 북한에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쪽의 문화와 남쪽의 정서를 북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뼈라를 날려 보내서 저쪽을 교란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듯이 북으로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이런 법제화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전단법이라고 만들라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것은 오해입니다. 북이 전단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거니와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할, 그런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북쪽과는 무관한 겁니다.

○**김건 위원** 저는 분명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마저 이렇게 침묵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문제, 두 가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제 제재하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오늘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일은 가능한 것이 또 정치의 영역이고 외교의 영역입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추가질의는 시간을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후보자님, 이제 오후가 또 깊어졌네요.

조금 전에 이재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이게 그전에 기본법으로 하느냐 절차법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헌법은 있는데 그에 대한 법이 없어요. 이게 발전법을 가지고는, 이게 기본법이 아니어서 절차에 대한 것만 규율하고 있어서 실제 지속가능한 평화적 통일정책 그리고 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국회에 법제실이 있지요. 법제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법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것을 아직 발의를 안 했는데 이것을 제가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통일부의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서도 평화통일정책추진 기본법을 준비하고 또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건도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본법에는 헌법에 따른 통일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도 만들고 이런 내용을 만드는 그런 기본법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장관이 되시면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재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면 개정과 윤후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평화정착 기본법을 어떻게 수립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의 핵심은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법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원래 남북관계발전법이 그런 취지로 기본법으로 추진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야 절충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정착 기본법도 역시 여야 간에 합의점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취임하면 차라리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후보자님,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이 잡혀 있는 건 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지난 정부의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수뇌부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언론 보도만 봤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물여섯 살이고 한 사람은 스무 살이었는데 정말 차디찬 형무소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연민의 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분이 이제 전쟁포로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전쟁포로는 원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제삼국 송환을 원하면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도 인도주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쟁포로는 기본적으로 본국 송환 원칙이지만 제삼국에서의 자유의지 확인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이 2007년에 쓰신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결단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지금 북한 상선이 더 이상 제주해협 통과를 못 하고 있지요, 그 뒤에는. 그런데 북한이 다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요청한다면 2005년과 같은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남북교류협력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5년 동안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횟수가 아마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군산에서 중국을 가거나 또 속초, 목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갈 때 공해상으로 직각으로 나가서 가는 것과 직선으로 삼각형의 밑변을 통해서 가는, 북한 영해 옆으로—직행로지요—이렇게 가는 것이 아마, 횟수는 잊어 버렸습니다만 북한 선박의 몇백 배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을 갈 때나 미국을 갈 때 비행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 더 걸립니다. 연료 소모라든지 비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훨씬 우리가 이익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북한 대변인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북한에는 아무런, 내부에 탄압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질문 도중에 웃으시나요?

잠깐 발언 중단해……

위원장님!

제 질문 도중에 웃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해서 지금 비웃으시는 건가요?

○**윤후덕 위원** 질의하면 저쪽에 하시지요.

○**김기현 위원**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은 다른 겁니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중단하시고 발언하게 하면 안 되지요. 저런 말씀 하시고 싶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거나 그게 맞지요.

○**김기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재정 위원** 저것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각자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윤후덕 위원** 후보자는 저쪽에 있어요.

○**이재정 위원** 중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저 말씀을 하시는 건 안 되지요.

○**김기현 위원** 왜 저한테 비웃으세요?

○**윤후덕 위원** 아니요, 후보자 저쪽에 계시다고요.

○**김기현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윤후덕 위원님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다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지해 주셨어야지요.

○**김기현 위원**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막 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내 북한 핵을 고도화하고 개발해 갔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계신다, 북한 편만 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흡수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이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자주적인 수단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핵 폐기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북핵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 의해서 핵우산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완전히 엉뚱한 편향적 판단을 하고 계시면서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전제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된 편향적 판단을 하시는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통일부장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현역 의원이시니까 민주당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계속하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통일부장관 맞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도 겸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요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으로서 개성공단을 없앤 국민의힘,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기현 위원**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온갖 불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하고요. 박왕자 씨 살해와 같은 사건들이 생겼는데 하나도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북한의 책임이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미사일 발사가 59회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40회의 2배 가까이 됩니다, 5년 환산하면요.

○**김기현 위원** 미사일 발사만 안 하면 북한의 핵은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누가 더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었습니까?

○**김기현 위원** 북한 핵 개발은 계속되었던 것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추가질의하지지요.

○**김기현 위원** 아니, 방금은 계속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정부에서 여섯 번의 핵실험 중에 네 번을 했습니다. 핵능력이 최고로 고도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느끼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솔로몬 선택에서 진짜 엄마를 찾는 과정이 떠오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요. 저야말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가장 드높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이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캐물으면서 중복조사를 하고 하던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한 주민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1회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 주체의 하나인 북한인권 정보센터인 NKDB는 또다시 버젓이 등장해서 하나원 출입의 특혜를 이유로 해서 그들의 진술을 캐물어 북한인권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진실된 모정,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인권 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고 함께 발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은주 전 청산인 부정채용, 알박기 인사 시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제가 지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 청산인 박은주 씨는요 2023년 5월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에 상근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의 이력을 보면 통일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던 분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 그리고 또 행정비서관 등등 합니다. 캠프에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후에 캠프에 일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고용휴직 내고 어떤 기관에 가려면 통일부가 인정하는 기관에 채용돼야 되는데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은 공직, 이런 유관단체는 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법령을 어기고 허가해 줬고 청산인까지 맡기고, 그러한 지적에도 어떤 조치도 통일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리어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알박기 인사 쓰려고 규정까지 바꾸더라고요. 청산인 교체 시에 임기 2년 보장 조항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하겠다는.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후 그 자리에 내정됐던 사람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하튼 박은주 씨 어떻게 됐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통일연구원으로 돌아갔고 승진까지 했어요. 이것 그대로 둔다면 통일부 신뢰 회복 얻기 힘듭니다. 관련된 내용 통일부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살펴보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내용 점검해서, 5월 18일 날 사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개성공단 청산인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개정돼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운영하는 가운데 이것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신고제의 취지를 되살려서 허용하겠다는, 반갑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따져 볼 문제가 운영의 문제입니다.

혹시 접촉 수리기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일정한 기간 동안 아마……

○**김준형 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허가제처럼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유효기간을 어떤 사람한테는 3개월을 주고 어떤 사람은 1개월을 주고 이것은 완벽한 어떤 의미에서 법의 원래 취지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 국적의 도움을 받아서 중개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중개인 접촉조차도 신고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달라져서 27건 중에 17건이 수리됐다 이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완전히 개방하고 그다음에 범법 사실이 차후에 발견되면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장관의 재량사항이 너무 많고 내부의 재량사항이 여전히 작동하면 장관후보자 다음에 다른 분이 와 가지고는 역시 이게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개방할 정도의 지침 또는 내부 규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하신 것, 접촉 수리기간을 자의적으로 1개월 3개월씩 적용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리기간 조항을 폐지하든지 아무튼 통일부가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서 허가제처럼 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인 접촉 부분을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래 그런 정부였으니까,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거의 허가제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제가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이 잘 돼 갈 때 시민단체에서 완전 개방을 원했을 때, 교류에 대한 개방을 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해서 결정적으로 나 빠질 때 민간교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실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알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제가 또 당사자기도 합니다. 제가 2018년 8월 달에 개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오후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북한자료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용선 위원** 내년이면 대규모, 아주 큰 북한자료센터가 준공됩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선 위원** 지금 현재는 70년에 만들어진 예전 중앙정보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법률이 아닙니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특수자료는 불온간행물 특수자료 이렇게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이 거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현격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만 갖고도 국가보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15개 부처 102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자료가 단행본 10만, 연속간행물 3만 4000, 비도서 18만 해서 총 32만 건인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특수자료,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일반자료, 특수자료가 7 대 3으로 특수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음악·예술, 의료, 아동과 같은 비이념적·정치적 분야에 있는 도서나 자료들 보면, 쪽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수자료로, 소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통제가 꼭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아주 이념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폐쇄적인 현행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동·서독 통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일반자료만이 아니라 방송, 신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류조차도 매우 독일 통일과 통합에 크게 역할했던 점들을 익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자료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처를 국정원이 아니라 통일부로 개편하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용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외통위를 빨리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국정원이 1970년대에 불온자료 취급했던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지금 50년이 흘렀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통일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희들이 특수자료 분류 실태라든지 자료를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질의 내용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나 또는 개인 도덕성 문제나 이렇게 다른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런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오늘

청문회가 마지막까지 장관후보자의 적격성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사실 국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건데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또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치면서 적어도 반국가세력, 빨갱이 혹은 친북세력 또 아니면 그런…… 그런데 상대방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결국 중국에 치달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의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고 저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 조건에서 처음 구성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장관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를 지금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 언어로 도대체 어떤 뜻이 됩니까, 이게?

아까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수차례 함께 해놓은 자리가 오늘인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사과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직접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은 명확한 저의 의견이고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북한 편만 들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김여정 하명에 의해서 바로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의 대변인 같다는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없는 거지요.

특히 국회의원의 생각을 가지고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렇게 생각하라고 결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민주당 간사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꼭두각시입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입니까? 꼭 똑같은 철학을 민주당하고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왜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릅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김정은과 같은 폭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저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건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북한은 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중요시……

○김준형 위원 저게 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이라 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게 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위원장 김석기 위원장이 회의를 관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일단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적절하지 않으면 제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김건 위원 아니, 저는 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문제를 지적해서 위원장님께 지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제 말씀을 계속하면 평화체제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에 있고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하는 발언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저야말로 진정한 의사진행발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 김기현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잠깐만 멈춰 줘 봐요’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잠깐만 멈춰 줘 봐요’ 하는 순간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은 위원장님의 판단으로 멈춰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발언이 시간은 멈춰진 채 마이크는 켜진 채 진행되는 게 우리가 합의한 상임위 진행의 룰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

사실 저희 진짜 말도 안 되는 3분이라는 질의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룰인데 그 안에서의 의사진행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도 역시 그냥 위원님들의 그런 말로 시간이 멈춰지고 그런데 마이크는 켜진 채로……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형평 그리고 또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들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 아무도 중간에 웃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지켜야 될 예의고 회의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 가지고 순간에 거기에서 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회의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면 그 질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티켓부터 먼저 지키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항을 지키자고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한정애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화면으로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북한 대변인 같다’, ‘북한 편만 들고 있다’,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이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는 처음 통일부장관후보자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통일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번 시험을 해 본 바가 있고 그 당시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곡을 겪고 다시 맞아야 하는 화해 협력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 주시면 사실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을 대변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치환을 해 버리면, 후보자로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건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후보자로서의 검증의 자리에서

후보가 그래도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후보자의 신상발언을 좀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오늘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세 번째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좋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계속해서 서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이 회의 진행이, 청문회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여러 현안 중에서 또는 안건 중에서 남북관계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다 아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얘기를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런 발언을 할 때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서로가 그런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본인의 생각을, 관점을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잘 배려해 가면서 발언도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위원장님,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발언하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는 것은 그냥 주장입니다. 그런데 ‘북한 대변인’ 그러는 것은 인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당신이 북한 대변인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야당을 중북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척결 대상, 처단 대상으로 본 거거든요. 색깔론입니다.

금방 김기현 위원님께서 저를 북한 대변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저의 인격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에 대해 흠탕물을 끼얹는 겁니다.

국회의 품격은 정치인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님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습니다. 이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 ‘북한 대변인’ 발언 취소해 주시거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우리 후보님 말이 많이 지나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을 경고를 하셔야지.

**○위원장 김석기** 무슨 말씀을 합니까?

**○김영배 위원** 후보자를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위원장 김석기** 그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애초에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군데? 그 말을 하신 분한테 경고를 하셔야지!

○**김기현 위원**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기** 아니, 의원이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김기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후보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정 위원** 후보자에게 모욕적이지요. 특히 후보자가 한 발언 대부분이 여당이 취하고 있는 공약으로 이미 주장한 바 있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여당 전체를 부정하는 식의 발언입니다.

○**김기현 위원**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후보자로 나와 있는 거지.

○**위원장 김석기** 여당 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자가 얘기하는 걸 유심히 들으면 제 기준으로도 북한 측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기현 위원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전부 들어 보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북한 대변인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 수석대변인 같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의 생각을 ‘잘못했어. 사과해’ 후보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이재정 위원** 지금과 같은 분단시대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달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현 위원** 청문을 지금, 누가 누구를 청문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지금 위원을 청문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재정 위원** 그럼 조금 더 존중하셨어야지요.

○**김기현 위원** 국회로 돌아가세요!

○**이재정 위원** 후보자가 피고인입니까?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언어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손을 든 사람 있어요.

○**위원장 김석기** 김건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건 위원**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김영배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이미 김기현 위원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의 표현이다. 주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청문 대상이 된…… 오늘 의원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온 사람이 생각을 표현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걸 ‘취소하라’ 이런 것은 조금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냉정을 찾고 청문을 계속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실소를 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나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김기현 위원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보이지도 않게 이려고 그냥 실소를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북한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항의하거나 거칠게 내가 지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질의하시는 분이 나한테 웃었다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할 때 품격을 스스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대변인’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본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데 후보자가 그런 답변도 못 합니까?

지금 김기현 위원이 자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데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이 몰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북세력으로 몰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몰락했는데 동일한 발상 아닙니까? 동일한 발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지금 윤석열이 몰락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아니, 나한테 물었잖아요.

○**이재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몰락했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이것 때문에 몰락했습니까?

○**이재강 위원**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나 비판세력에 대해서 중북세력이다,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내란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대통령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정동영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분명히 인격에 대한 말살이고 명예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슨……

○**위원장 김석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발언한 김기현 위원에게 ‘사과해라’ 그것도 지나치고, 특히 후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여기가 누구 청문회입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정식 위원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기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좀 진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가급적 위원회 전체의 여야 위원들을 다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우리가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오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3차 질의까지 들어가면서 이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시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께서도 좀 더 진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여야를 떠나서 각 위원마다 다 자기의 주의·주장과 자기의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서로를 지켜 가면서 주의·주장을 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통일부장관은,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북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북을 상대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국무위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위원후보자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적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말 그대로 인격체를 규정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떠나서 동료 국회의원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할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좀 더 진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석기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인사청문회가 정말 좀 후보자의 능력과 또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권위적이고 또 상대방을 뒤흔들고 반동이다 어떻게 규정지어 버리고 그리고 좀 폭압적이지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한다, ‘대변인이다’. 저는 마치 그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몰아세우고 소명도 또 인격도 없이 막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난하면서 닳아 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도 평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대변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가 이렇게 자꾸 색깔 페인트칠하듯이 칠해 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북한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페인트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묻고 듣고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의사진행발언.

○김기웅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면 어떤 발언이 적절하나 품격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 중에서, 저희가 나중에 회의록을 다 보게 될 텐데 만약에 봤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되풀이하고 있다, 본인이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에게 보인다면 ‘그동안 북한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유사하게 하시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북한이 하는 주장을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보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어디 북한 얘기를 했냐? 본인의 소신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보면 사람을 이상하게 디파인(define)하는 용어가 되는데 그것도 보면 인격 모독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청문회를 하면서 죽 들은 얘기 중에 위원님께서 ‘아, 보니까 이것은 북한 얘기들이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북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시네요?’라고 했다면 저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사실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결론은 다들 하고 싶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갔으니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의사 표현들은 하신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 옳고 그르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위원장 김석기 차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지호 위원 여기서 가장 미래 세대에 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은 중북과, 북에서는 반동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돌아가시고 학살당하고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저는 김기현 위원님의 말이 그냥 그 말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에서 돌아가신 분들, 학살당하신 분들, 반동으로 몰리고 중북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어떤 면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혹은 사례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파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검증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몰리고 단정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사, 개인 콘텍스트(context)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중북이라는 말 하나로, 빨갱이 같다는 말 하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죽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북한 대변인 같다 혹은 어떻다라고 단정짓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역사를 아는, 우리 역사를 공부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셨다는 것도 문제고 알고 얘기하

셨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이렇게 매카시즘같이 특정 사람들, 특정 부류로 단정지어서 공격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사실 언어는,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무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개척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다른 직접적인 무기를 들거나 주먹을 쓰거나 하는 대신에 언어를 통해서 말로 정치를 하고 그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말은, 정치인의 말은 사실 무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국민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차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갱이라는 용어, 북한 대변인이라는 용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처절하게 봐 왔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절대로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이번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로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사과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를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국회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 아까 장관님한테 하신 말씀처럼 여기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시고 종료하고 순서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기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은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당연히 제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 불편하게 더 할 것 없이 회의 진행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더 안 하고 마칠 거고요. 아니면 제 얘기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이재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합니까? 사과하실 건지 아닌지……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차이점을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대변한다 또는 하는 것 같다, 김석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어는 치우친 것 같다 이 문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대변인 같다고 하고 규정을 해 버리면 모든 말씀과 앞으



로 할 일이 북한 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대변하는 것 같다’와 ‘대변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지요.

○김기현 위원 질문할 것 많습니다. 빨리합시다. 지금 질문할 게 태산처럼 쌓였는데.

○이용선 위원 간사님이 적절한 중재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 순서는 한정에 위원님입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7월 14일. 올해가 2회째인데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아사 등을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102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앞세워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분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해서 행사 개최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이걸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 남북하나재단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은 처음에 초기 정착할 때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자립·자활 지원하고 5년간의 관리 그것만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금 보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은 사무소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남북하나재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최소한 아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독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가 다 고독사이시고 아사하시거나, 어딘가 손 내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남북하나재단이 그 어려울 때 결국은 손을 내밀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한정에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 찡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어렵게 대한민국에 정착했는데 3만 4000명, 헌법 10조가 말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과연 대한민국은 3만 4000명의 탈북주민들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 탈북민 3만 4000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안전 문제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 맞고 통일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직원이 500명도 채 안 되는데 3만 4000명의 서비스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하나재단과 협력하지만 누구든지 주관 부서, 책임 있는 부서가 중요한데 통일부보다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

그러나 어느 부서나 부처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통일부 내에서도 이걸 놓지 않으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후보자로서 제가 만일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서 정말로 3만 4000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에 위원**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지자체로 다 넘기기는 합니다. 넘기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사각지대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분들이 완벽하게 혼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 부처인가가 중요한데 현재는 통일부가 주관 부처라서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저는 경제부처에서 일하다가 외교부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경제부처에 있을 때 외교부 직원들 엄청 욕했습니다. 경제부처 직원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경제·통상 일을 주로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경제부처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외교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입장을 대변한다고, 상대국이 이러이러하니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다 외교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게 저는 외교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

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랬어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북한이 아주 잘못된 일이다. 유감이다. 그렇지만 아마도 북한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그것은 북한을 옹호한다 기보다는 북한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인권 문제도 똑같은 거지요. 북한인권 개선되어야 되고 북한인권 침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것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만 통일부장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현 상황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북한의 시각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대변을 해 줘야 그게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또는 다른 북한과 대립하는 그러한 기관들과 협의할 때 좀 더 균형 잡힌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지금도 잘되고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게 아주 큰, 국익에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북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일부를 둘 이유가 없고 통일부장관을 청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홍기원 위원님께서 저를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적과 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걸 인정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보수 정부가 만들었던 기본합의서에서 시작하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부터 시작하자.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노선이 옳았다, 자유의 북진이 옳다, 자유에 의해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란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란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법 단죄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100년 뒤에 우리 역사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가능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짧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북한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정동영 후보자를 북한 대변인이라 규정짓는 것을 보니까 자칫 평화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규정지을까 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저는 87년 헌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를 휩쓸었던 매카시즘과 학살, 분열과 진영 대결의 씨앗이 바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함부로 규정지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규정짓고 악마화하는 이 비극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의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어야만 했는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 대변인 이런 생각들이 이 땅에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이 목적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당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교류조차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막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인권증진재단에서 주요하게 연구하고 주장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경제제재, 불필요한 또는 시대적으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경제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서두에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속에 있는데 합심하면 못 넘을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에 산적한 난제 앞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북한인권 증진,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지요. 아까 중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도적 견지에서 동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포(胞)가 태(胎)라는 얘기입니다. 동포, 같은 태에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고 동질성이 없고 어떤 지도자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동포라는 것은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가 굶고 있으면 도와주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것조차 끊어진 지가 6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재 문제가 지금 중첩돼 있는데요.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선 북·미 대화가 선결과제고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대화의 의제로서 결국 북도 제재 해제 없이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의 간절한 수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역지사지해서 북이 그렇다면 금방 김 위원님 말씀처럼 북한인권증진재단의 과업 중의 하나가 이런 제재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게 얘기 중에 혼선이 좀 있는 게 통일부의 미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대화, 교류 협력, 평화, 상황 관리를 하시는데 헌법 4조가 통일부의 기본 목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 그것을 위해서 상황 관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지 대화와 교류 협력이 궁극적인 목표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잘 관리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을 쌓아 가자 하는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자에게 질문드리는데 제가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더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좀 더 이해를 해 보니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첫 번째는 분단 80년 동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그 상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현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때가 있었냐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동·서독과 달리 남북은 400만이 죽고 다치는 동족상잔을 겪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넘어서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통일부 계실 때 기억할 겁니다. 2005년, 8·15 광복 60년이었습니다. 북이 대표단을 서울에 보냈습니다. 30명의 대표단이 와서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에 헌화·참배했습니다. 그것은 제스처일지라도 대단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북의 지도자가 대표단을 보내서 이제 6·25를 넘어서자……

○김기웅 위원 답을 오래하시니 추가질의할 수밖에 없네.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시간

이 조금 있는데 그 말씀은 알겠고.

그렇다면 그 80년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 80년은 구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 싸울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적대적 공존의 시대였다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남북 간의 충돌, 군사적 긴장 혹은 여러 가지 도발들이 환경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없지만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무장공비 남파, 잠수정, 천안함 폭침, 연평도, 납치, 테러 많았잖아요. 그 많은 80년 역사 중에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위원장 김석기** 추가질의하시고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는데 통일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작년 통일의식조사,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한 것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36.9%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5%, 그래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7년 조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30 청년층의 답변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6.2%에 달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 되게 좀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년층의 통일 인식이 이렇게 낮은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또 무관심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물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통일과 평화의 가치보다는 말 그대로 이념 중심의 반공교육이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정적 인식들이 이렇게 저변을 확산시켜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런 탓도 있을 것이고.

또 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냐라는 답변에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보자 좀, 정말 충분하게 이것을 제대로 설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위원장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었지요. 남북 철도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놓고 양 진영 간에 이게 퍼 주기다 이런 사회적 논란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절대로 퍼 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흑백논리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념논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 분단된 우리 조국,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좁은 영토와 좁은 인구를 가진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우리 경제

에 전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는 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경제협력 사업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실제로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연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에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인건비가 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면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자본들이 컨소시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계돼 연계 개발들이 가능해요. 이미 북한에서는 남북철도길을 따라서 경제특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답보 상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평화통일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잘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정동영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립을 하고 이것들을 전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세대에게 교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이 자유롭게 돈과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자유왕래의 시대를 열게 되면 배낭여행도 갈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구체적 이익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저는 확실한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구체적 증거자료로 제시한다면 2010년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은행(IB)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대한민국이 예외국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사에 예외 없이 고도성장, 중성장, 성숙한 단계에 가면 저성장으로 가는데 한국은 저성장, 1% 제로 성장에서 다시 10%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남북한의 자유왕래의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고도성장으로 자본주의 발달사의 예외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보고서, 그것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자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 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참사

반정부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오늘 우리 통일부장관후보자를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김기현 위원의 인식이 그 수준에서 저는 매우 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식 수준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내란과 계엄을 통해서 민생까지 폭망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김기현 위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적합한 위원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많은 분들이 김충식이라는 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DMZ의 정부 땅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37번지 비무장지대 내의 약 8000평의 국가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저기에 무슨 무궁화공원을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법인 이름은 나라사랑 무궁화봉사회라고 하는데 혹시 통일부에서 인가를 내준 법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부 부처에 쪽 물어봤어요, 누가 김충식에게 저 땅을 위탁해 줬는가. 파주시도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도 모른다고 하고 국방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장관후보자로 계신데요,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씨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성군까지 복수의 DMZ 지역에 유사 특혜 개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비선 실세에게 저렇게 국가 땅을, DMZ 안의 민간인이 접근 불가한 땅에, 그 주변에 군사 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모른다. 제가 저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저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의 안보에 허점이 뚫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김충식을 지난번에 국수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어떤 연유로 최은순의 내연남이 저런 국가 땅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예.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것 잠깐 답변드리고 하면……

○**위원장 김석기** 예,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통일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번까지 주셨으니까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DMZ 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 접근이 안 되는데 여기에 어쨌든 비선 실세든 특혜를 받았든 간에 평화적 용도로 개발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DMZ 내의 토지를,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이병진 의원이 내셨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내셔서…… 지금 완전히 금단의 땅, 금지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화재 발굴 또는 생태환경 조사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기현 위원** 오늘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께서 데뷔하는 무대이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주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통일부장관후보자가 되어서 청문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저 자리에 앉혀 주시고 청문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고 없고는 최혁진 위원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한 지 21년이 되었는데 야당, 여당, 야당, 여당, 다시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제가 조선 의원으로 두 번이나 국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성명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지나간 보안이 해제된, 기억하실 겁니다, 엑스포. 그것 갔다가 난리가 나서 저한테 영광스럽게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셨고 그다음에 골드버그 대사, 화를 냈든 안 냈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를 안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또 사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저는 국힘 의원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당은 국힘당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예. 국민의힘,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이재강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오늘 폄하를 당하신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분들 중 두 분은 지난 3월 서해에서 또 네 분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3월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실제로 거의 120일을 장기 체류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통일부 예산 꼭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이들이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관 부처들의 예산들을 활용하는 등 이들을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로 지원했던 걸로 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류하는 북한 주민 인도적 송환 과정에서 제도적인 뒷받침,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실제로 북한 주민 표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후보자님, 저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의 3배 정도 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데 그것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40대에서 고립률은 2배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은 바로 퇴사를 하고 계속 직장을 구하는 상태고 월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의 60% 정도 수준, 대학 진학률은 절반, 정신 관리 필요자는 약 78%에 달합니다.

이게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아니면 장관후보자님께서 20년 전에 장관을 하셨을 때, 제가 하나원에서 의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처음 천착했을 때,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의사로서 그 당시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더 많이 죽을까.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다양한 난민 현장에도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아픈 건 사실 사회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한 이 양쪽의 사회가 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침해를 훨씬 더 많이 보실 겁니다. 또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들을 훨씬 더 많이 보실 겁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반동분자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적 박해도 있을 것이고 식량 위기나 의료 접근성의 제한과 같은 인도적 위기도 있을 것이고 경제 제재와 같은 복합적인 정치·안보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차별과 사회적 낙인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이 죽게 합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대변인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낙인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아픕니다. 북한이라는 굉장히 빨강게 물든 단어 속에 갇힐 때 각각 개인이 가졌던 삶은 지워지고 북한에서 오는 그것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이렇게 고통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통일부가 답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야 됩니다. 인도적 문제도 해야 되고 경제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고민해야 되고 평화 문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에, 남북 간에 풀 부분 풀고 글로벌 협력 관계에서 다자간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님께서서 단일한 어떤 정치적 정부 혹은 다른 정부에 따라서 취해졌던 단일한 접근이 아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전략들, 민간이 해야 될 전략들, 국제기구들이 해야 될 전략들을 굉장히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탈북민 3만 4000명이 왜 아프고 더 많이 죽을까, 참 아픈 질문입니다. 사회가 아프기 때문이다라는 답도 가슴에 닿습니다.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이 문제, 적어도 탈북민의 평균 자살률이 우리 국민의 평균 자살률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이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60%가 아니라 그래도 70%, 80% 상향, 우상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 과정에 차지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통일부 명칭과 동시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3년 9월 달에 통일부가 총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을 감축을 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류 협력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회담 그리고 남북출입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 총 합쳐서 148명이었는데요. 이것을 64명으로 절반 이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45%밖에 안 되게 조직을 반토막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아예 이쪽 일은 이름도 보면 다 줄여 가지고, 남북관계관리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업무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런 조직 개편 방향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지금 통일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또 김건 간사님께 그 구체안이 만들어지면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전체에서 81명이 줄어들었는데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에서만 84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첩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같이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2019년도 미국 유엔 본부에 있는 국제위기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개성공단의 경제 교류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 됐다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입주 기업들이 연평균 8%의 수익 증가세를 보였고 고정자산은 연간 26%씩, 이윤은 11%씩 성장했다. 그래서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갖다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남북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교류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개성공단은 단순히 공단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의 설계사, 동방정책의 설계사라고 불렀던 에곤 바르 박사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개성공단을 일컬어서 한국형 통일 방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독일식도 아니고 베트남식도 아닌 한국형 통일 방안은 바로 개성공단 방식이다. 개성공단을 해주공단으로, 남포공단으로, 신의주공단으로, 원산공단으로 넓혀 가는 것이 경제 통일이요 그다음에 오는 정치 통일, 마지막에 법적 통일이 다가올 것이라라고 선지자처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명 정부 내에 최선을 다해서, 개성공단이 지금 닫힌 지 10년입니다.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2011년 10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FTA 국회 비준안 동의 처리의 필요성 찬반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통부가,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도 보면 외통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이것 의심 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상당히 문제를 크게 지적하셨던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인식이 물론…… 이때 저는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직원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교부가 하는 미국과의 공조 노력을 이렇게 인식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신다 그러면 정책 조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외부적으로 자주파와 동맹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 정책 조정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지 묻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 두겠습니다. 제가 당시 민주당의 FTA 반대 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반대한 것은 FTA가 아니었습니다. 프리 트레이드(Free Trade), 자유무역을 200% 지지합니다. 지지했습니다. 다만 ISDS,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왜 우리는 호주처럼 못 하는가. 외교부는 왜, 호주와 미국이 FTA 협상을 하면서 그 독소조항을 뺐는데 대한민국은 호주만 못하단 말인가.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주도 필요합니다. 동맹도 필요합니다. 둘을 같이 가야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 외교관들에게 ‘미국인인지 의심스럽

다'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에는 저는 유감을 다시 표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다음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1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희망하는 분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윤후덕 위원** 개성공단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윤후덕 위원** 통일부장관이 주무 부서로 개성공단을 다 이렇게 주무하셨고 그리고 또 정리하는 데에도 통일부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핵심이 산업단지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산업단지만은 아닙니다. 2000만 평 중의 800만 평은 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00만 평은 주거시설과 교육과 공원과 등등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1차 개발은 그렇게 한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1·2차 개발이 산업단지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산업단지,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평화경제특구라는 거예요. 저하고 박정 의원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걸 제정법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이것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째, 금년에는 통일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시키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개발계획을 경기도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수립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하고 또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그런 단지 또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은 좀 상당히 나쁘지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쁘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핵심입니다, 그게. 파주는 개성공단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린 지역입니다. 개성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파주의 땅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불어나기 시작해서…… 윤 위원님, 파주가 아마 계속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에?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평화경제특구……

○**윤후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평화경제특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빨리 좀 당겨서 착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다라는 통일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 줬어요.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였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것은 남쪽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두 군데, 경기도에 세 군데, 강원도에 다섯 군데, 지금 열 군데가 특정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지역이 경기도에 네 군데 또 강원도 하나 해서 열다섯 지역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감을 내서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를 만드는 거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이 접경지역이 군사지역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당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 주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구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그 취지에 대해서 십분 이해합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2005년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허용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해운 협력 필요성 취지에서 허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닷길 내주고 협력의 손길을 내민 데 대해 5년 뒤에 사실 유례없는 초고강도 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북한 상선의 상당수는 군사나 무역회사 소속이고요 군 통제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부산에 해군 대형 기지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종종 정박하는 이러한 기지가 됐다는 점에서 인근 해역을 북한 선박들이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하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죽 들으니까 이른바 보수정권은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깨졌다, 반면에 진보정권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위협도 줄어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사례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2017년 11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기지요. 그때 북한이 화성-15형 ICBM 발사한 뒤에 2018년에는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큰 평화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북한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는데 이때 쏜 미사일들이 보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사용되고 있는 KN-23이라고 불리는 것, KN-24,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사거리가 400~800km, 그야말로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미사일들이 본격적으로 시험발사가 시작돼서 계속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인 전술핵 위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2018년 미사일 안 쏘 때, 평화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계속 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주셨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 계약서가 후보자 배우자께서 살고 있는, 원래 지목이 농지였던 것을 사서 농지 전용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계약서인데요. 주소지를 보니까 배우자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요. 저는 전주였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약서를 빨리 내시기 어려웠던 것이, 그래서 미루다가 아침에 부득이 내신 것 같아 보이는데 서울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농지 취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늦게 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순창에 땅을 샀는데 어떻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전에 질문할 때 답변 주셨습니다. 매도자, 매입자 주소지가 허위 전입됐다는데 순창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에 사셨던 배우자께서 순창으로 허위 전입을 한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셨다. 그랬으니까 일단 주민등록법에는 명확하게 위반됩니다. 주민등록법 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인데요 농림부 예규에 따라서 반드시, 농림부 예규 8조의4에 의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이나 노동기계 확보방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공란입니다.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57조(벌칙), 6조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삼각형 안에 있는, 빨간선 안에 있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농지는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경작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땅이고 이것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것이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도로 예정 부지로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순창군청의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구역 외의 토지이며 도로사업으로 인한 경작 제한은 없습니다’.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중에서 텃밭이라고 낸 자료가 있습니다. 텃밭은 사실은 다른 지번이고 668-18번지는 명확하게 방치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썼을 때가,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지금껏…… 2022년 11월 18일 날 계약서, 또 다른 땅을 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24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세 가지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없는 뽕을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공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발상조차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부를 추구하거나 축재를 위해서 공직 하지 않았습니다.

농지 취득이 아니라요 선거에 실패하고 귀향·귀농해서 농사지으려고 집 지을 땅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작……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약 5000평의 두릅밭이 있고요, 1만 평에 벌목해서 호두나무 심었습니다. 그리고 500평의 집터에다가 조정수 경작하고 있습니다. 대농입니다. 농사짓는 준비 위해서 집 지었습니다. 그 집 짓기 위해서 600평 샀는데 200평 수용되고 400평 중에 300평 대지로 전환해서 농가주택 지었습니다. 50평짜리, 집터에 딸린 쪼가리 땅입니다. 거기에 농사 안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두릅도 있고 그다음에 버려진 땅도 있습니다. 그건 집터입니다. 농지 취득이 아니에요. 서울에 살든 전주에서 살든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요 한 사람이라도 내려오면 대환영입니다. 이사비도 주고 집들이 비용도 줍니다. 마을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비용 받지 않았지만.

전후 사정을 파악하시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주장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합니다. 사실에서 많이 벗어난 주장으로 그렇게 색칠하지 마십시오.

○**김기현 위원**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법 위반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것이 후보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것은 사실 농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비료도 사야 되고 퇴비도 사야 되고 농약도 사야 하는데 농협조합원으로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땅을 판 이장 집에 잠시 전입한 것, 그것은 실정법 위반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질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이렇게 지켜봤는데 전체 땅 중의 일부 내용 삼각형으로 빨강게 됐던 것, 제가 PPT를 띄우지 않았으니까 보셨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던 화면에서는 빨강게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 보니까 굉장히 비탈진, 경사가 진 곳이었다라고요. 일반적으로 경작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유도 있었던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대지에 딸린 쪼가리 땅인 거지요.

○**이재정 위원** 굉장히 작은, 그렇지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리고 거기는 도로공사가 곧 시작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농사를 안 지었다고, 50평 정도 되는……

○**이재정 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갖고 등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는 부분인데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신고에 있어서 내 땅이다라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이 우리 재산신고에 채권의 방식으로 등록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등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소유권으로 등록될 내용은 아닌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정말 야심차게 제시된 통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도 허술했고 그 진행 과정도 정말 공론화 과정도 일체 거치지 않고 몇몇 전문가, 정부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조직되고 별것 없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들여다보면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흡수통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를 비교해 보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였지요. 이 방안이 사실상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계속되기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연속성이 유지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6·15, 그다음에 10·4까지 이어지는 이 기조에 기반을 두고 주요 합의가 이어져 온 것도 같습니다. 1989년, 지금 국민의힘의 전전전전 전신이었던 그런 정당에 의해서 추진된 이 통일방안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250회의 세미나 간담회 그리고 1만 6801명의 설문조사 그리고 논의, 논조 분석 총 426건 그리고 국회 통일정

책특위의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더라고요. 이것들이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거쳤는데 이 모든 것이 일거에 무시당하는 것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은 나날이 조금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합의를 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4조 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보수정부에 의해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합의에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실질적인 그리고 또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현재 세대에게도 공감하고 와닿을 수 있는 통일에 대한 합의의 노력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주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노태우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직선제 대통령 정부로서 가장 저평가된 정부입니다. 특히 민족 문제에 관해서 여야와 대화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당시 여소야대였습니다. 야 3당이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이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또 국론의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 5년 뒤에 1994년에 8·15 선언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민족을 ‘한’ 자를 빼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빼대는 그대로입니다—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갔는데 김영삼 정부는 갔는데 왜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야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까?

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실천의 첫걸음은 이 6대 합의서를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비준을 국회가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재비준을 저는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통은 사회·경제적 인권은 진보 쪽에서 주장을 하고—북한인권 얘기입니다—정치적 인권은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인권보고서나 여러 분들이 지적한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를 생각하면 그것도 꼭 맞지 않는다. 탈북자 중에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동조한 사람들만 대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인권보고서……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 중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국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탈북자의 증언을 수록하면서 날짜를 다 누락시켰고요. 과거와 현재를 뒤섞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수용범의 증언이 다 90년대 이전 것인데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당시에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향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시 북한이탈주민 수록 증언의 정확성 및 구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마치 실수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단 한 자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고서를 만드는 데 인쇄하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PDF도,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은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영어로 된 이 PDF를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인권위원회라든지 대북제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더 가디언 같은 데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지금도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PDF 자료부터 당장 부정확한 것을 찾아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저는 먼저 온 통일, 우리 학생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해서 전체 2645명인데요. 이 중에 북한 및 제삼국 출생 아동이 1534명, 저 1534명 중에 75% 이상이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은 중국을 비롯한 제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정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전혀 못 합니다. 우리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모국어가 우리말이 아닌 아이들, 중국말 또는 제3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르치는, 그냥 우리말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어 말을 하면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만이 어찌 보면 제대로 우리말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나 기관이 그런 것이 갖추어진 곳은 없고요.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배경학생 학교 및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이것은 올해 현재인데요—전체 한 5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일제 대안학교가 총 11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요.

이 중에 특성화학교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네 곳, 이곳은 통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이 여섯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학력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이지요. 재정 수준이 격차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교육의 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수준의 교육이 보장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의 정부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A 인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그리고 통일부로부터 받는 것 해서 8억 3000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수입—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건데요—12억까지 합쳐서 약 21억 정도를 지원받는 반면에 인가를 받지 못한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하나 재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이렇게 해서 약 3억 8000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재정 수준 격차가 이렇게 심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트타임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대안학교하고 기관인데요. 대안학교가 정식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파트타임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을 하는데 한 주에 4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2시간을 해야 합니다. 시간당 수당은 3만 5000원입니다. 과연 괜찮은 수준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현황이 이렇습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좀 전체적으로 교육부와 통일부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여섯 곳이 있고. 인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곳 역시도 정식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수준 점검을 통일부가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괜찮은 교육을 제대로 제공을 해 주는, 통일부가 좀 책임을 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우리 한 위원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북한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고 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미비 이것 역시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겠고요. 이 청소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령 등등을 따지면 지금 인가학교와 미인가학교의 지원이 여서일곱 배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것을 여야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곧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미인가학교에 다니든 인가학교에 다니든 학생들은 똑같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이재정 위원께서 질의한 통일방안, 노태우 정부 때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또 이것을 승계한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것이 국민적 공감과 또 여야 합의로 준비된 통일방안이다,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걸로 또는 폐기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붕괴론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만 자유에 의한 북한 주민 해방이라는 것이 흡수통일, 붕괴론 아니면 뭘겠습니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였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폐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특히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상임위 때 당시 통일부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거다,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독트린이 마련된 과정을 볼 때는 전혀 정당성이나 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걸로 저도 보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적대와 증오의 산물입니다.

○**홍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6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 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하노이 딜 실패 이후에 유엔 제재나 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북한과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하기에는 민간 협력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 데 그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정치·군사 문제는 결국 키를 미국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미국이 또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닙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그런 점에서는 박정희·김일성 시대에 합의한 7·4 공동성명이 대원칙으로서 지금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2년에 맺어진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금 그 뼈대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했던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좀 더 벗어나야 뭔가 새로운 진전을 만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반성할 것은 제대로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감사합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지난 분단 80년 동안에 우리가 먼저 도발한 기억나는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직접은 안 하셨는데 일단은 뭐……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예,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

그러면 주로 도발은 북한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강조하시는 7·4 공동성명, 72년부터 6대 합의라고 하는 게 지금 53년 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지난 반세기 조금 넘는 관계에서 회담을 몇 번 했냐 하면 정상회담 다섯 번 포함해서 667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거거든요. 합의서가 정상회담 합의 5개 포함해서 258건이 됩니다. 두세 달에 하나씩 합의를 냈다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회담을 하고 두세 달에 하나 합의를 냈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7·4 공동성명부터 기본합의서 해서 박정희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 회담 횟수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못지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횟수가.

그러면 그동안 53년 동안 이렇게, 53년이 됐든 52년이 됐든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도발과 충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나 대화나 합의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핵심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계승되어 왔다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1991년 기본합의서는 반공 통일론을 극복하고 상호 공존, 평화 공존을 선언하고 실천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2000년 6·15부터 된 거지요. 철도·도로 연결을 하고 금강산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열고 하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였으니까요. 이것을 계속 계승했었으면 아마 핵문제도 저는 해결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박·박근혜 정부 때 단절된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요지는 지난 50년 동안 그 많은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91년 기본합의서를 쭉 이어 왔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72년 7·4 공동성명부터. 지금 강조하시다시피 7·4 공동성명……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72년 7·4 공동성명은 장기 독재를 위한 구실로 써먹었습니다. 남북 둘 다 적대적 공생으로 김일성 체제의 강화 그리고 박정희 체제의 영구 총통화 그걸 위해서 통일을 정치적 도구로 쓴 겁니다. 그러나 남북이 그때 합의한 정신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92년부터, 최소한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것이 북한의 그 이후의 도발에는 우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 뜻이 그렇게 되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정책을 뒤집는 것은…… 동·서독이 교훈입니다.

○**김기웅 위원**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추가질의하시지요.

○**김기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아까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연기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어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왜냐하면 실기동훈련도 있고 전략자산 전개도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시뮬레이션, 위게임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속으로는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때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우리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가자지구에도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최근 2023년인가요, 북한은 전선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이제 쭉 깔고 있습니다. 깔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취약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한미 연합훈련이 너무 공격적이다,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정상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도 중단하겠다는 것을 왜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걸 눈치를 봐야 합니까?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 축소·조정·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습니까?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북한 총 GDP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돈을 국방비에 투입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린다? 그런 소아적 좁은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체제는 현재 한미 연합전력으로 되어 있고 한미 연합전력이 유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취약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연합훈련을,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한미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연합 안보체제는 굳건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훈련 없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훈련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대폭 강화해서 실기동훈련 중심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문재인 정부처럼 도상연습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아침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2시간 됐습니다마는. 추가질의할 분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하고 네 분하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네 분을, 추가질의 한 번씩만 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이재정 위원** 그러면 후보님 잠깐 쉬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정회 좀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후보자님, 혹시 정회가 어떻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추가질의를 3분씩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압축해서 5분씩 해서 네 분만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님 마무리발언을 하시고 오늘 청문회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5분 안 채우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좀 첨언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고 후보자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 미 펜타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최고 수뇌부에서 결정된 사안이어서 상당히 한미 양국 군이 당황을 했었고요. 그 뒤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양국 군 훈련은 하되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만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훈련이라는 게 다 대대급 사단급 뭐 여단급, 단위별로 훈련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손발을 맞춰 봐야 유사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에 봉착을 했고 아까 후보자께서 컴퓨터 도상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훈련하는 것과, 야외 기동훈련 하는 것과 컴퓨터로 도상훈련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컴퓨터 훈련이 발전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때우면서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이후에 사실은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이 부활이 돼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은 크게 두 가지 대규모 훈련이 있어요. 2월 달에 실시되는 것 그다음에 다음 달에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있는데 여기는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도 있지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제가 알기로 주한미군이나 우리 합참이나 다다음 달 말에 실시할 플랜을 이미 짜 놓고 준비를,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아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연합방위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합훈련도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직 후보자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보다 큰 틀에서 새 정부가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큰 틀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에게서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일부 방송에서도 출연을 해서 가지고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력을 뒤로 빼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정부의 효력 정지는 근시안적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알고 보니까 사실 효력 정지한 것들이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자극과 어떤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충돌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9·19 합의의 효력 정지가 공교롭게 그 시기에 걸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유용원 위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사실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북한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혹시 믿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북의 핵 기지가 영변이지 않습니까? 영변에 5MW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라늄으로 전개되는데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영변 그러면……

○**김기현 위원**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영변 우라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라늄탄이든지 플루토늄탄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포기할 것이라고 후보자가 믿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영변의 유명한 것은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집이 출간된 지 100년입니다, 올해 12월 달이.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핵 기지가 아니라 진달래꽃 영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희망사항이야 다 똑같지요. 후보자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영변에 진달래꽃 피기를 바라지, 원전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김 위원님이랑 같이 영변에 진달래꽃 보러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북한의 핵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적 시각이고, 특히 이란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핵무기가 없는 경우, 그전에는 리비아 사태를

봤겠지요. 핵무기가 없는 경우에 겪게 되는 북한 정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 독재정권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의에만, 가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2005년도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 및 증산 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셨습니다.

그 뒤편 마지막 것을 보시면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잘해 주셨잖아요. 북한하고 굉장히 서로 유화하고 대화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계셨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2005년 9월 19일 6자 공동성명 당시 북은 전략적 결단,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 파기된 것을 북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은……

○**김기현 위원** 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계시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당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5년……

○**김기현 위원** 아니요, 지금도 그러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이미 핵보유국가를 선언했고 이미 핵물질과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북핵 포기는 사실 어려워진 것이지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8년 9월 달에 뮌헨 협정을 맺고서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영국에 돌아와서 국민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독일 총통과 다시 한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면서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뮌헨 협정이라고요. 이 종이를 흔들면서,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는 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실상 핵무

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평생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노력을 안 할 겁니까? 노력을 해야 뭐라도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노력을 해야 미국이 그에 대해서 뭐라도 조치를 취해 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범국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불량국가의 길이 아닙니다. NPT 조약에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그게 자주국방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주권이죠.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말로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개는 반통일의 결과를 가져왔고 말로 지금 북핵 해결을 얘기하는 분들이 북핵 강화의 행동을 보여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증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고도화를 더 부추기는 돈만 갖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핵실험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박근혜·이명박 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그 돈은 다 누가 주었습니까? 다 DJ 정부 때부터 줬던 돈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기현 위원** 아니,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잖아요.

.....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아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좀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 92년 기본합의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던 것은 우리의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노력이 일관되지 못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는 남북만의 노력만 갖고는 필요충분하지 않습니다. 북·미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간 남북관계의 핵심은 핵문제였지 않습니까? 핵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적대 관계의 변화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기웅 위원** 그러면 요약하면 북한의 도발은 우리 때문이든 미국 때문이든 북한이 원하는, 뭔가 불만이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북한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북의

도발적 성격은……

○**김기웅 위원** 그러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아무튼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그런 화해 협력 정책이 180도 급변침하면서 북쪽의 대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은……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선 대 선·강 대 강의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한 것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걸 댔고요.

다음 사항은 간단한 건의, 제안인데 아까 군사훈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기, 조정 이렇게 하셨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에 보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군사 문제를 풀어 갈 때는 하나를 떼 내서 우리가 뭘 이렇게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북 간에 상호적으로 기본합의서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씩 풀어 가는 것이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제안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봤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연기할지 조정할지도 어느 일방이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국가에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일이고 그 카드를 왜 미국이 마음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자체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기본합의서에 입각해서 풀어 가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코멘트 두 개 하고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께서는 ‘10년 후 통일’이라는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는 첫째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걸린 문제고, 둘째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셋째 미·중 등 주변 강대국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전작권 문제는 순수히 안보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주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통이나 자존심의 문제로 보거나 발언권과 협상력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하노이 노 딜에 대해서, 하노이 때 네오콘들이 영변을 포기하는 스몰 딜을 안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하노이에서 노 딜이 된 이유는 영변은 이미 미국이 두 번 산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째 사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이해 못 한 북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몰 딜, 강선을 포함하는 스몰 딜을 받아들이지 못한 북한 측에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핵 포기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바꿀 것인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정, 미·북 수교는 다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면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없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미·북 수교하면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귀결로서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도 협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 김일성 주석은 당시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를 미국에 보내서 미키 켄터 차관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공히 92년과 2000년에 걸쳐서 얘기했던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다시 한번이요, 미안합니다.

○**김건 위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줘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거나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것이 후보자님의 입장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렇습니다.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이 역대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고 그것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후보자님이 취해야 될 입장은 제 생각에는 한미 연합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든지 북한이 와서 참관을 하고 그다음에 오해를 불식하고 이 훈련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미 연합연습을 약화시킨다거나 연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목적은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건데 이 군사훈련을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정동영**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신데 큰 틀에서 얼마든지 같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은 강하게 하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지만 상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여소야대의 국면 속에서 노태우 정부가 발휘했던 소통 노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당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던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만일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을 중점에 두고 매사를 김건 간사님,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보고드릴 것이고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정말 일관된 대북정책, 일관된 대외정책을 펼 수 있는 데 뒷받침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통일부에 대해서 귀한 조언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책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김석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정동영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후보자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로써 업무 적합성 그리고 도덕성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김기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답변하신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관련 진위 여부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 간사 간 협의 후에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전체회의는 공지해 드린 대로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자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위원 경과보고서는 18일 날……

○위원장 김석기 아니, 그것은 의논을 합시다.

○김영배 위원 아까 말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아직 결론 안 났잖아.

○김건 위원 채택 일정은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김영배 위원 아니, 일정은 18일 날 해 놓고 채택 여부는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석기 아니, 외교부장관 끝나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닌데.

○위원장 김석기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김영배 위원 아니, 아까 18일로 날짜 잡아 놓고 채택 여부만 따로……

○위원장 김석기 지금 합의가 안 났다고 하잖아요.

외교부장관 17일 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날 18일 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아니, 처음부터 18일 날 하기로 했었잖아요, 날짜 잡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채택 가능 여부는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일정은 18일로 하기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건 위원 아니, 그것을 채택을 할지 안 할지가……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합의 여부는 별도 문제니까.

○김건 위원 별도 문제…… 아니, 그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18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석기 이것 끝나고 나중에 다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할 수 없잖아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도 오늘 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20인)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상욱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유용원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최혁진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출석 공직후보자

정동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정착안전정책관 윤민호  
기획재정담당관 마경조